

---

지역간 상생발전이 대한민국을 키웁니다

#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

---

- 일시 : 2013년 1월 30일(수) 14:00~17:00
-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(지하 2층)
- 주최 :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



/대/통/령/직/속/

지역발전위원회

# 행사일정

| 시 간           |     | 진 행 순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3:30 ~ 14:00 | 30분 | □ 등록 및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□ 개회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4:00~14:05   | 5분  | 개회 및 내빈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원빈 박사 (지역발전위원회)   |
| 14:05~14:10   | 5분  | 인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 철 위원장 (지역발전위원회)  |
| 14:10 ~ 14:15 | 5분  | 경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원섭 박사 (지역발전위원회)   |
|               |     | □ 주제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4:15 ~ 14:45 | 30분 | ■ 발표① : 김정호 교수 (KDI, 前 강원발전연구원장)<br>-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- |                    |
| 14:45~15:15   | 30분 | ■ 발표② : 허재완 교수 (중앙대학교)<br>-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-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5:15~15:45   | 30분 | ■ 발표③ : 이정식 교수 (前 국토연구원장)<br>-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-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5:45~16:00   | 25분 | □ 중간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□ 종합토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6:00~17:00   | 60분 | 토론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명수 명예교수 (전북대)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지정토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의섭 교수 (한남대)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박시현 위원 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박영갑 교수 (동의대)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손균근 부장 (국제신문)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염돈민 센터장 (강원발전연구원)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상대 부장 (경기개발연구원) 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재훈 교수 (영남대)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성수 교수 (제주대)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상필 실장 (전남발전연구원)   |
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황희연 교수 (충북대)       |

## 발표① :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

김정호 교수 (KDI, 前 강원발전연구원장)

# 오늘의 삶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

2013. 1. 30



김 정 호 (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)

## 차 례

### I. 지역의 어제와 오늘

### II. 지역정책: 반성과 새로운 방향

### III. 지역발전의 미래상

### IV. 주요 추진전략

1. 지역 일자리 창출
2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3. 농어촌 활성화
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5.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



## I 지역의 어제와 오늘

## I. 지역의 어제와 오늘

### 1. 대한민국: 영광과 도전

- **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“압축성장”**
  - ◆ 1962년 경제개발에 착수한지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부국으로 성장
- **경제적인 부와 함께 “민주화” 달성**
  - ◆ 국제사회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가로 인정, 개도국이 벤치 마킹하고 자 하는 첫 번째 대상 국가
- **향후 도전 : “4대 갈등·양극화” 해소와 30-50클럽 가입**
  - ◆ 압축성장과정으로 빚어진 계층간 격차, 세대간 격차, 대·중소기업간 격차, 수도권-지방 간 격차 등 4대 양극화·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
  - ◆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인구 5천만명·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해야
  - ※ 우리나라는 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20-50 클럽에 가입. IMF는 2016년 30-50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

# I. 지역의 어제와 오늘

## 2. 지역의 현주소

- **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취약한 지방경제**
  - ◆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지방 주요 도시들이 '지역중심지' 기능을 상실하면서, 이는 지방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
  - ◆ 참여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해왔으나 수도권-지방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
- **강력한 중앙권력과 지방의 영향력 약화**
  - ◆ 지방자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권력은 여전하며, 재정분권 없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불가능
- **지역간 삶의 질 격차와 일자리의 불균형**
  - ◆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교육, 의료 등 복지, 문화예술 및 안전 분야에서 크게 열악
  - ◆ 구직자가 선호하는 우량 기업과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
- **지역 상생발전의 미흡**
  - ◆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 심화
  - ◆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 취약

5

# I. 지역의 어제와 오늘

## 3. 지역정책의 추이

- **참여정부 이전**
  - ◆ 개발연대(1960-80년대) : 압축성장을 위해 지역간, 부문간 불균형 성장 전략을 구사,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
  - ◆ 민주화, 세계화 시대(1990년대 이후) : 지방의 개발욕구의 폭증으로 권한 및 자원배분, 개발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중앙-지방간, 지방-지방간 갈등 극심
- **참여정부 : 과감한 균형발전정책 수립, 집행**
  - ◆ 국가균형발전특별법, 특별회계 등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. 그러나,
  - ◆ 개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고 경제적 비효율 야기
- **이명박 정부 : 광역적 성장기반 구축**
  - ◆ 규모경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접 시도를 묶어 5+2광역경제권을 설정하여, 광역단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려 노력. 그러나,
  - ◆ 광역경제권의 실체가 모호하고, 광역정책 추진기제가 작동되지 않으며, 인위적인 권역설정으로 지역간 협력과 '광역화 시너지'를 얻는데 실패

6



## Ⅱ 지역정책: 반성과 새로운 방향

## Ⅱ. 지역정책: 반성과 새로운 방향

### 1. 반성과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

#### ● 반성과 비판

- ◆ 중앙집권적 정책추진 : 중앙정부 시각에서 지역정책 결정
- ◆ 관 주도 정책추진 :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추진, 부작용 발생
- ◆ 정책공간단위 : 광역적 접근이 시기상조라는 비판 제기
- ◆ 이론과 현실의 간극 : 이론적이고 추상적(3차원 전략)

#### ●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

- ◆ 현실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정책
- ◆ 주민의, 주민에 의한, 주민을 위한 지역정책
- ◆ 지역 니즈에 충실한 지역정책
- ◆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, 지역 통합에 기여하는 지역정책
- ◆ 지역정책의 주 대상은 주민,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우선순위

## Ⅱ. 지역정책: 반성과 새로운 방향

### 2. 정책 내용과 참여 주체의 기능

#### ● 정책내용

- ◆ 성장동력 발굴,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, 인구 특히 젊은 층과 지역 인재의 지역 이탈을 적극 억제
- ◆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 정주공간의 정비,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, 특히 도시경쟁력 제고
- ◆ 공공복지서비스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민생안전 확립
- ◆ 지역간 연계협력과 상생발전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며, 이를 지역통합의 수단으로 승화 발전
- ◆ 지역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권 확대

#### ●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할

- ◆ 중앙정부: Enabler 와 Facilitator
- ◆ 광역자치단체: Facilitator
- ◆ 기초자치단체: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주체

9



## Ⅲ. 지역발전의 미래상

### 1.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

#### ● 비전

- ◆ 국민의 행복과 지역 통합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

#### ● 목표

- ◆ 주민의 삶의 질 향상
  -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
- ◆ 지역 일자리 창출
  -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청년, 장년, 노인 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
- ◆ 도시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력 강화
  -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와 우량 기업 유치
- ◆ 지역간 상생발전
  - 수도권과 지방, 대도시와 중소도시,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이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발전함으로써 국민통합 선도

11

## Ⅲ. 지역발전의 미래상

### 2. 미래지향적인 ‘한반도 경제권’ 구축

#### ● 구축의 필요성

- ◆ 서울·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경제권을 글로벌 광역경제권(MCR)으로 육성
- ◆ 중부경제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

#### ● 한반도경제권 구축 방향

- ◆ 기본 방향
  - 3+1 한반도경제권 : 우선 중부경제권, 남부경제권, 제주경제권의 2+1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, 장기적으로 북한을 북부경제권으로 하는 3+1 한반도경제권 구축 추진
- ◆ 권역별 발전방향
  - 중부경제권 : 세계 속의 MCR
  - 남부경제권 : 동북아 속의 지역거점
  - 제주경제권 : 동북아의 해양관광거점
  - 북부경제권 : 통일 대한민국의 북부개발거점



12

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1) 왜 지역 일자리가 중요한가?

#### ●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계속

- ◆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인구억제 및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으나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
- ◆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'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' 유출
  - ※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률이 50%를 상회하고, 수도권 고교 출신 중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85%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

#### ● 지역에 사람을 붙잡아 두려면 좋은 일자리 필요

- ◆ 비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'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'는 점을 들고 있음
  - ※ 2008~11년 간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20만개의 일자리 중 25%인 5만개 만이 비수도권에서 발생
- ◆ 수도권에는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인재를 '흡인'하고 있음
  - ※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상용종사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

15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2) 그 동안 지역정책은 일자리보다는 산업육성에 치중

#### ● 미래성장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현재 일자리 만들기에 소홀

- ◆ 특정 선도산업 중심의 targeting 전략은 저성장, 융복합 등으로 각인되는 '뉴노멀 시대(New Normal)'에는 그 정책효과가 미흡
- ◆ 특히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기존 기업이나 산업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음

#### ● 선도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일자리와 인력 모두 부족: 인력 수준의 미스매치 현상 발생

- ◆ 선도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 대기업이어서 지역인력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 발생

#### ● 일부 선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대학은 산학협력 저조

- ◆ 대다수의 지역 기업이 산학협력에서 소외되고 있는 반면,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일부 기업은 중복, 또는 연속적 지원을 받고 있어, 지원대상기업의 확대발굴 필요

#### ● 지역산업 지원기관이 너무 많고 추진체계 복잡

- ◆ 지역산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다양한 지역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취약

16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3)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

- 신산업 육성은 국가성장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
  - ◆ '내일의 일자리'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는 장기적,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부주도로 추진
- 지역 일자리정책은 기업육성을 통해 실현
  - ◆ 지역 일자리정책은 '산업육성' 보다는 실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핵심
  - ◆ 특히 대기업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
- 지역 중소기업을 잘 이해하는 지방중기청이 지역 일자리정책 총괄
  - ◆ 지방노동청 : 노동자 보호에 치중,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
  - ◆ 지식경제부 :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중점
  - ◆ 지방자치단체 : 정치적 영향과 갈등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
  - ◆ 지방중기청 :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이 풍부; 따라서 지역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

17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4)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

####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

-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확대
  - ◆ 현재 미래성장산업육성 중심의 광특회계 '지역경제활성화사업'을 지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사업으로 재편
    -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애로기술, 경영, 마케팅,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확대
  - ◆ 복지확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수단 개발
    - 집적화 및 연계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 허용, 임대형·아파트형 공장 공급 등
- 애로기술, 뿌리기술 등 중소기업 R&D에 특화된 전문기관 역할 확대
  - ◆ 중소기업 전용R&D지원, 산학공동연구 등과 같은 연구개발역량 강화
  - ◆ 애로기술 해소, 생산기반기술개발 등에 R&D역량을 집중하고, 특히 금형 등 '뿌리산업' 육성
  - ◆ 생산기반기술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'생산기술연구원'의 기능 및 역할 확대

18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4)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

####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

- 지역별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
  - ◆ 지역의 현재 여건과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화산업과 연관 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, 육성
- 도시형 산업과 연관 기업을 육성, 저소득층 및 여성의 일자리 확대
  - ◆ 도시형 산업 및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및 여성 일자리 확대: 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형 산업을 위한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시설 공급
- 지역고용협약 제도의 도입
  - ◆ 지방중기청, 노동청, 지자체, 지역대학, 지역기업, 노동조합,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'지역파트너십'을 구축하여, 지역의 고용창출 목표와 목표달성전략 수립, 추진
- 지방중소기업 종사자 지원
  - ◆ 지방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금융,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인건비의 추가 부담 없이 직원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19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4)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

#### ② 대학중심 산학협력에서 기업중심 “산학융합” 으로 전환

- 지역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인력의 지속적 배출
  - ◆ 지역밀착도가 높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현장교육실습 지원 강화
  - ◆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의 '마이스터 대학' 전환, 고급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
  - ◆ 공과대학에서 1~2학년 과정은 학과목 중심으로, 3~4학년에는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(Co-op 과정) 개발
- 대학을 기업지원의 전진기지로 활용
  - ◆ 부처별로 분산된 산학협력, 인력양성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규모 확대
    - 산학융합지구(지경부), 창조캠퍼스, HRD 사업(노동부)사업 등을 교과부의 LINC사업의 틀 내에서 '지역발전인력양성제도'로 통합
  - ◆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신기술기업의 집적화 도모
    -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또는 부지에 창업자,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를 위한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(incubator)의 확대

20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4)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

#### ③ 지방투자 유치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

-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,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, 산업단지 만들기
  - ◆ '생산기지'의 이미지가 강한 산업단지를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,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,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, 스마트화, 녹색화 지원
    - 부처별로 추진되는 QWL사업과 산업단지 재생,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을 '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'으로 통합하여 추진
  - ◆ 거점 산업단지와 주변 산업단지간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고, 미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
- 대·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◆ 대·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켜 대·중소기업 교류 활성화, 공동 교육훈련사업 등 추진
- 국내 U-Turn 기업의 지방 유치 지원
  - ◆ 해외로부터 U-turn하는 기업의 지방투자 및 정착을 위해 '엔터프라이즈 존'을 지정,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 및 입지비용 지원

21

## 1. 지역 일자리 창출

### 4)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

#### ④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를 확립

- 지방중기청, 지방노동청, 지방교육청 등의 협의기구 운영
  - ◆ 지방중기청, 지방노동청, 지방교육청 등 지방행정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와 유관정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
  - ◆ TP, 산업단지공단, 경제자유구역청, 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도 협의기구에 참여시켜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 확립
- 창의적이고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, 현장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
  - ◆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상업성·사업성 평가 전문기관, 고위험 기술에 투자 가능한 엔젤자본 육성
  - ◆ 창업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의 마케팅과 시장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

22



##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
## 2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
### 1) 지방도시 쇠퇴와 도시경제 악화의 악순환

- 대다수의 국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'도시국가'
  - ◆ 국민 10명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(2010년 도시인구 비중 90.6%)
  - ◆ 도시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활성화는 필수
- 지방도시 쇠퇴로 지방경제는 붕괴위기
  - ◆ 2005~10년간 전국 144개 도시 중 55개(38.1%)에서 도시쇠퇴가 진행중이고 쇠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 41개를 포함하면 96개(66.6%)에 달함
  - ◆ 지방도시의 쇠퇴는 구매력 감소→소비위축→기업위축→일자리감소→지역경제 침체 → 지역자본이탈→투자위축→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
-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중추도시 대부분에서 도시쇠퇴 진행
  - ◆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쇠퇴가 가장 심각하며, 일부 중규모 도시에서도 상업지의 쇠퇴가 두드러짐
  - ◆ 중소도시에서는 인구유출과 도시경제 침체로 원도심과 주변부가 동시에 쇠퇴

## 2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
### 2)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의 필요성

- **도시는 경제! 특히 중추도시 경쟁력은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**
  - ◆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시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했고, 특히 도시쇠퇴나 지역간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
- **지방 대도시의 거점·중추기능을 회복해야 중소도시도 소생 가능**
  - ◆ 지방 중추도시시는 행정·교육·의료·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공 서비스 공급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
  - ◆ 지방대도시의 거점기능 상실은 중소도시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쇠퇴로 이어짐
- **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**
  - ◆ 지방 중추도시권을 육성해야 지방의 대도시권이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, 동시에 지역발전을 견인 가능
  - ◆ 지방 중추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을 지역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

25

## 2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
### 3)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

#### ① 지방 중추도시권의 설정과 특화 육성

- **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중추도시권 설정**
  - ◆ 지역 특화발전의 거점인 대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쇠퇴된 도시의 경제·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
  - ◆ 중추도시권의 공간 범위는 도시권내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
- **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여 도시권별 특화발전 모색**
  - ◆ 부산(울산, 창원)권 :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의 핵심 도시권으로 육성
  - ◆ 대도시권 : 광역시 및 50만 이상 중견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역별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
    - ※ 대구(구미), 대전(세종, 청주), 광주(나주), 전주(익산, 군산)
  - ◆ 중소도시권 : 인구 규모 20만명 내외의 도시 중 대도시권의 영향권,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정
    - ※ 천안·아산, 포항·경주, 여수·순천·광양, 진주·사천, 제주, 원주, 춘천, 안동·영주

26

## 2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
### 3)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

#### ②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

- 원도심 및 도시 경제기반 재생 : 중심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
  - ◆ 원도심 재생은 도시 중심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, 상업·업무기능의 재생과 도심 주거기능의 회복을 동시에 추진
  - ◆ 역세권 재개발,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, 재래시장 활성화 등 도시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·일자리, 상업기능의 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
- 기성시가지의 정주환경 재생
  - ◆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금융·조세지원을 통해, 도심 폐가·공가 정비 또는 리모델링, 취약계층 주택개량 등 주거기능 회복과 일자리 마련에 기여
- 민자유치 활성화와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 도입
  - ◆ 지방도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임대부 개발방식, 민자유치, debt financing, 도시재생 기금조성(예: revolving loan fund) 등 다양한 재생금융/투융자기법 개발, 지원
  - ◆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상호협조방식, DIY, 사회적 기업형 등 다양한 재생기법 실험, 개발, 보급

27

## 2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
### 3)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

#### ③ “삶의 질 향상” 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

- 지역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방 명문 고교 설립·육성
  - ◆ 지방 소재 우수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, 우선 지원
  - ◆ 지방도시에 명문학교 설립·육성 지원
- 도시권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 의료체계 확충
  - ◆ 대형병원을 도시권 거점병원으로 지정, 육성하고 거점병원 중심의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여, 의료·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
- 도시권내 지자체간 연계교통체계 개선
  - ◆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도로망 확충, 도시권 내부의 혼잡·단절구간 개선, 대중교통의 광역 네트워크화, 커뮤니티 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
  - ※ 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
- 생활 기반시설 및 문화, 체육, 환경시설의 공동 이용
  - ◆ 도시권 단위의 하수·폐기물처리장, 체육관, 문화원 등의 공동 설립·이용사업 지원
  - ◆ 녹지공간, 보행자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 쇄신

28

## 2.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

### 3)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

#### ④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

##### ● 중추도시의 중심기능 회복 및 생활서비스 질적 향상에 역점

- ◆ 도시권 특화산업, 도시재생사업, 삶의 질 향상사업, 도시권 인프라 정비개선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 정비
- ◆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발굴·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은 특별회계를 통해 포괄지원

##### ● 중추도시권 육성 관련 법령의 정비

- ◆ 단기 : 균특법 개정을 통해 중추도시권 기능 회복 및 생활서비스 지원 조항 추가
- ◆ 장기 : '중추도시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 제정
- ◆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"도시재생 특별법"의 조속한 제정과 도시권 계획체계, 교통망 정비에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

##### ●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 체계 정비

- ◆ 광특회계를 개편하여 도시활성화 계정을 설치하고 개별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 중추도시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이관하여 재원 확대

29



### 3. 농어촌 활성화

#### 1) 농어촌의 오늘과 내일

-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공동체 붕괴와 농어촌 활력 상실
  - ◆ 최근 10년간 ('00년 ~ '10년) 도시인구 10.1% 증가, 농어촌인구 3.7% 감소
  - ◆ 65세 이상 인구비율 ('10년)은 전국 11.3%, 농어촌 20.6%
- 농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의 걸림돌
  - ◆ 도시민의 40.3%가 삶의 질에 만족, 농어촌 주민은 29.7%에 불과
  - ◆ 병·의원급 의료기관의 85% 이상이 도시에 집중
  - ◆ 복식학교 비율 ('10년)은 도시 1.7%, 농어촌 28.6%
-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증가로 향후 농어촌 인구는 증가할 전망
  - ◆ 2010년 향촌형 인구이동이 향도형 인구이동을 추월
- 향후 농어촌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정주공간, 휴양공간, 산업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전환될 전망
  - ◆ 따라서, 이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농어촌 활성화 정책 추진

31

### 3. 농어촌 활성화

#### 2)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

-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
  - ◆ 농어촌정책의 영역이 농어촌관광, 환경 및 경관보전 등의 분야로 확대
  - ◆ '삶의 질 특별법' 제정 (2004년)과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(2008년)으로 지역의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 - ◆ 상수도 보급률, 의료기관수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
- 기존 농어촌 정책의 한계
  - ◆ 하드웨어시설 위주의 지원정책, 시설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재로 이용률 저하
  - ◆ 귀촌.귀농지원정책은 과도한 홍보 전략과 개별 지원 방식 때문에 지역활성화 효과 미흡
  - ◆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에 있어,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비 부담이 커 실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
  - ◆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사무국의 실질적 역할 미흡

32

## 3. 농어촌 활성화

### 3) 농어촌 활성화 정책의 주요 과제

#### ① 중심지 읍·면을 농어촌의 생활 거점으로 육성

- 마을 단위의 분산투자로는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개선에 한계
  - ◆ 소도읍 개발,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지역주민의 체감효과 매우 낮음
- 농어촌 중심지인 읍·면을 공공서비스공급의 중심지와 농어촌생활 거점으로 육성
  - ◆ 기초지자체별로 1~2개 읍면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서비스 배치
  - ◆ 귀촌귀농인들이 농어촌 '중심지'에 정착하도록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 개선
-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복합지원센터 설치
  - ◆ 보건, 복지, 교육,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도 제고
  - ◆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격지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
  - ◆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 및 관리(사회적 일자리 창출)

33

## 3. 농어촌 활성화

- 공공복지 및 편의시설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·이용·관리
  - ◆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, 관리비 절감 및 이용률 제고
  - ◆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시설의 이용, 관리 효율화
  - ◆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

#### ②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정책의 개선

- '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'에 의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항목별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을 차별화
  - ※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은 주거, 교통, 보건의료 등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
  - ◆ 이행 실태가 저조한 항목별로 추가지원 등 검토
-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
  - ◆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
  - ◆ 대안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

34

### 3. 농어촌 활성화

#### ③ 귀촌·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

- 귀촌·귀농 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,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추진
- 귀촌·귀농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  - ◆ 빈집, 지역일자리, 농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, 제공
  - ◆ 전국 읍·면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포털사이트 운영
- 민간주도의 현장밀착형 중간지원 조직 구성 및 지원
  - ◆ 귀촌·귀농인과 지역주민이 소통 및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
  - ◆ 귀촌·귀농인에 대한 교육, 컨설팅 등 지원
  - ◆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활동가를 발굴하여 육성
- 소규모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  - ◆ 빈집을 리모델링, 귀촌귀농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
  - ◆ 읍·면 소재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, 주거공간 확보
  - ◆ 향후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

35

### 3. 농어촌 활성화

#### ④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

-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, 각기 다른 부처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 및 예산 낭비 발생
  - ◆ 도로건설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미흡
- 지역발전 지표에 의해 50개 정도의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
  - ◆ 지역 특화자원 개발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
  - ◆ 지역 특화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,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
-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포괄지원을 통한 지자체 자율방식으로 추진
  - ◆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재원을 차등 배분
  - ◆ 지자체간 협력 여부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
  - ◆ 지자체, 주민, 지역기업, 대학 등이 공동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
  - ◆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지원 및 컨설팅 강화
  - ◆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사업 추진, 지역일자리 창출

36



## 4

##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# 1) 재정지원의 한계와 확대 필요성

##### ● 재정은 지역발전의 성패 좌우

- ◆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주재원확보가 관건
- ◆ 국가재정 중 지자체 세입은 20%에 불과, 재정사용액은 42.2%, 지방채무는 증가
  - ※ 중앙, 지방, 지방교육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각각 42.5%, 42.2%, 15.0%
- ◆ 지방재정의 의존 비율 59%, 국고보조금 비율 35%를 차지, 지역발전 위한 자율재원의 확대 필요(2011년 기준, 재정자립도 51.9%; 재정자주도 76.7%)

##### ●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 확보 필요

- ◆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경기 침체,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발전엔 큰 걸림돌
- ◆ 저출산, 고령화와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증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신호(지자체 총지출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, 2007년 15.4% -> 2011년 28.5%)
- ◆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확보는 필수!

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2)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

- 광특회계 : 자율성 미비, 규모 축소, 부처사업과 중복
  - ◆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개편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, 사업비 규모 축소(2009년 9.58조원 → 2012년 9.41조원)
  - ◆ 광역선도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성 모호; 부처간 또는 부처내 경쟁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, 효율성 및 효과성에 의문(특히 책임성 문제 제기)
  - ◆ 재원배분 방식에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채택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
- 포괄보조금 : 기초지자체 자율성 침해와 평가체계 부실
  - ◆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보조금 이관,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기 때문에, 기초지자체의 사업 기획 및 운용에 자율성 제약
  - ◆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처별 평가로 실시,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중복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모호
- 국고보조사업 : 경직성 및 지방부담 확대와 사업 선정의 불합리
  - ◆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유형 및 사업선정 원칙이 불투명하고 '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비율' 설정이 불합리
  - ◆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;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최저 또는 표준 서비스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계

39

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2)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

- 지방소비세 : 배분기준 및 지역간 재정격차에 대한 논란
  - ◆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 및 인식 차이로 공감대 형성 곤란
  - ◆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시도간 차등 배분되고 있으나 배분 기준에 대한 논란 증폭
  - ◆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지역간 배분을 둘러싼 논란 지속  
※ 수도권 22.5%, 비수도권 광역시 28.1%, 도 49.4%로 배분
- 지자체의 비효율적 재정지출 및 복지예산 증대로 자체사업 축소
  - ◆ 지자체의 중복 투자, 선심성 사업, 타당성 검사의 미비 등, 비효율적 재정지출
  - ◆ 지방재정 전체 세출예산 중 복지관련 예산수요 증대로,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축소
  - ◆ 복지사업 등 90개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계획이나 급증하는 복지사업을 충당하기는 역부족

40

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3)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

#### ① 광특회계 개편 및 운영효율 제고

##### ● '지역활력증진특별회계(가칭)'로 개편, 4개 계정 설치

- ◆ 일자리 창출, 도시권 육성, 농어촌 활성화,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분야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특화
- ◆ 지역일자리기반강화 계정 :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,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, 지방투자 촉진 관련 사업 등 지원
  - 기존사업 중 지역산업과 인력양성 등을 재편, 타 회계 사업 이관 및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
  -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은 기존의 전략, 특화산업 지원사업을 중기청 사업과 통폐합 후 재구성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추진
  - 인력양성·산학협력은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Co-op 교육, 후진양성 체계 구축,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지원, 평생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, 대학·전문대 역량 강화와 LINC 사업 지원
  -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 개편하여 U-turn 기업, 지방이전 기업 지원

41

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3)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

- ◆ 도시활성화 계정 : 각 부처별 도시 관련 사업을 조정·통합하여 재원확보,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활성화 사업 지원
  - 기존 광특회계 사업 중 도시활력증진지역, 성장촉진지역 및 18개 기능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, 도시권 관련 중앙부처 사업을 선별하여 기능별로 재편
  - 신규사업으로 도시권 연계교통망, 도시재생, 문화예술 테마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등 추진
  - 운용방식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후 관련 부처와 협의, 지역위의 조정 및 확정 후 각 지자체 별로 포괄보조금 지원
- ◆ 농어촌특화발전 계정 :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 발전, 교육·의료 등 격차완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 지원
  - 사업 구성은 시·군 주도의 낙후지역 발전사업, 국가 주도의 삶의 질 격차 완화 지원 사업 등
  - 운영 방식은 시·도별 배분에서 시·군별 직접 배분방식으로 전환
- ◆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: 기존 사업을 유지 (변화 없음)

42

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3)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

- 회계 및 기금간 사업 조정을 통해 회계 운용 효율화
  - ◆ 기존 광특회계에서 타 회계로 이관될 사업은 5개 단위사업, 1.3조원 규모
    - 광역경제권 선도산업, 거점기관지원사업 등 국가R&D와 중복되는 사업, SOC사업, 국가정책 목표 하에 지정 및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지원사업 등
  - ◆ 타 회계·기금에서 신설회계로 이관될 사업은 27개 단위사업, 9,796억원 규모
    - 도시재생관련사업과 농어촌종합개발사업, 귀촌·귀농 정책관련 사업, 생활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, 일자리·지역/도시경쟁력 관련 사업 등
- 포괄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
  - ◆ 포괄보조금사업의 배분방식인 시도별 배분을 시군구 배분으로 조정하고 공식(formula)에 의한 배분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
  - ◆ 중앙부처는 사업지침을 간소화하여 간섭 최소화; 지자체 자율성 보장(지역발전위원회에서 침해소지 여부 검토 및 확인)

43

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3)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

####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

-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
  - ◆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,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, 자의성 배제
  - ◆ 국고보조금의 운영 경직성 완화, 효율적 활용을 위한 책임성 강화
  - ◆ 10~100%의 기준 보조율을 5단계 내외로 간소화, 차등보조율의 합리적 조정
  - ◆ 분권교부세 제도 중 복지사무를 국가 사무로 환원, '복지교부세' 신설 검토
  - ◆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정 시 「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」의 검토를 의무화
- 지방소비세제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확보
  - ◆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5% 인상을 추진하고, 배분 가중치를 조정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
  - ◆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생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며, 배분 기준을 합리화, 현실화

44

## 4.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

### 3)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

####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

##### ●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,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

- ◆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,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무리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
- ◆ 재정운용시스템인 e-호조시스템과 연계하고 재정지출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
- ◆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'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' 구축 및 운용
- ◆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에 '재정지출 효율성 점검 지표' 개발 추가

##### 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재정 및 민생재정 확보

- ◆ 분권교부세를 복지교부세로 전환하고, 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'국가가 책임지며, 지방이 집행하는' 체제로 시스템 구축
- ◆ 국고보조금 보조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(차등보조율 지표 마련)
- ◆ 복지지출 상한제 도입: 복지지출 관련 제도정비 전까지는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수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 원칙

45



## 5.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

### 1) 지역정책 집행체계: 현황 및 문제점

#### ● 현행 지역정책 집행체계

- ◆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획, 계획 수립, 사업 평가 등의 기능 수행
- ◆ 지식경제부는 지역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주도하고, 국토해양부, 농림식품부, 행정안전부, 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소관 사업 집행
- ◆ 지역에서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,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 전담기관 등 설치

#### ● 중앙 :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

- ◆ 지역발전위원회는 권한, 인력, 재원이 부족하고, 광특회계예산 사전심의기능이 없는 등 범 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
- ◆ 지식경제부도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및 종합적 관리에 있어 역할 미흡

#### ● 지방 : 지역 집행기관의 역량 부족 및 협력체계 미약

- ◆ 광역발전위원회 권한이 미약하여 지역 총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 집행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정책시너지 창출 제약
- ◆ 지자체는 기획, 집행, 재정에서 역량이 부족;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계 부재

47

## 5.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

### 2)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

#### ①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강화

#### ● 지역발전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

- ◆ 부처간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, 주요 사업의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'행정위원회'로 법적 지위 전환 검토
- ◆ 행정위원회로서 지역발전 전략 및 계획 수립, 광특회계 예산 심의, 연계협력사업 시행, 정책성과 평가, 교육훈련, 국제교류 등의 기능 수행

#### ● 지역정책 주무부처 교체

- ◆ 주무부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정책의 총괄, 조정, 관리 기능 수행
- ◆ 기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부처 위상 및 정책관리 역량,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등을 감안한다면 타 부처로의 이관이 바람직
- ◆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국토해양부, 농림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역량과 새 정부 지역정책의 기초 및 역점 시책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를 선정

48

## 5.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

### 2)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

#### ② 지역 집행기관의 역할 강화

##### ● 광역발전위원회 기능 재편 및 지역 집행기관 협력체계 구축

- ◆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기관 명칭, 위상, 기능을 재편하여 지역별 계획 수립, 연계협력사업 발굴, 사업 관리 및 평가, 조사·분석 등의 업무 수행
  - ※ 수도권, 강원권, 충청권, 전북권, 광주전남권, 대경권, 동남권, 제주권에 설치
- ◆ 광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TP, 선도산업지원단, 산단공, 중기청, 노동청, 국토청 등 지역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

##### ●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역할 강화

- ◆ 광역지자체: 지역개발사업 예산신청, 기초지자체 사업 기획·집행·평가 지원(TA) 및 중복 조정, 연계협력 지원 등 중개기능(Clearing House) 강화
- ◆ 기초지자체: 독자적인 사업 기획, 집행,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
- ◆ 지자체의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 자율성 확대,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확대, 민자유치 및 지방채 발행 지원 등 추진

49

## 5.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

### 2)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

#### ③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

##### ●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중요성

- ◆ 개별 지자체로는 규모경제 확보가 어렵고 예산부담이 과중한 공공서비스 공급, 지역개발사업의 비용 절감, 기업유치 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연계협력 필요

##### ● 연계협력사업 확대

- ◆ 문화관광 및 R&D 분야에 치중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일자리, 복지, 교육, 인프라(교통, 환경, 수자원, 방재, 안전) 등으로 확대
  - ※ 기초-기초간, 기초-광역간, 광역-광역간 협력
  - ※ 도시-도시간, 도시-농촌간, 농촌-농촌간 협력 등

##### ● 연계협력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정비

- ◆ 광특회계 연계협력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, 매칭비율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
- ◆ 연계협력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간 협약체결, 추진조직 구성, 재원분담, 협약 이행장치 등을 담은 (가칭)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법 제정 추진

50

## 5.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

### 2)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

#### ④ 지역정책 평가제도 개선

##### ● 지역발전위원회 총괄평가 기능 강화

- ◆ 재정사업자율평가(기재부)를 지역위 평가로 일원화하고, 중앙부처의 지자체 자율 편성 사업에 대한 평가 폐지

##### ● 지자체 평가 부담 완화 및 내실화

- ◆ 평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평가에서 제외하고, 포괄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대신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평가
- ※ 연차별로 중점사업 또는 중점 사업군을 평가하는 집중평가제 도입

##### ● 성과중심 및 현장평가 체계 구축

- ◆ 구체적,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고, 현장중심의 output 보다는 outcome을 중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사업에 도움되도록 평가제도의 내실화
- ◆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확대하고, 제도개선 반영 장치 강화

51



# 감사합니다

## 발표② : 중부경제권 구축방향

허재완 교수 (중앙대학교)



# 중부경제권 구축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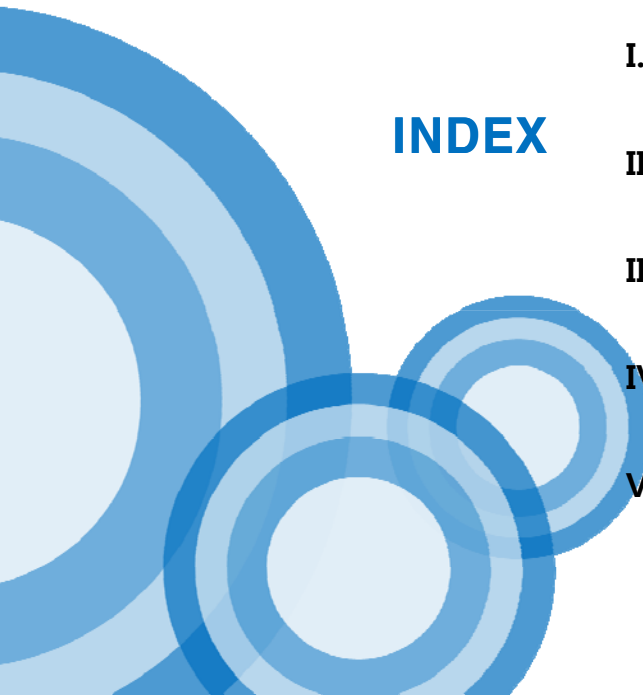
2013. 1.

허재완 (중앙대)



---

## INDEX

- 
- I. 왜 “중부경제권”인가?
  - II.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구상
  - III. 중부경제권의 위상과 역할
  - IV. 역할강화를 위한 실천전략
  - V. 맺는 말

# I. 왜 중부경제권인가?



## '광역경제권(MCR)' 개념의 유지는 필수적

### ▪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, 광역경제권 개념의 유지는 지속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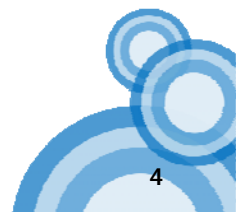
- 국경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의 경쟁단위
  - \* 서울의 경쟁상대 → 부산 or 동경.북경 ??
- 경쟁을 이기기 위한 각국의 노력
  - \* 인근 국가와 협력 → 지역경제블록의 형성: EU (27개국)
  - \* 인근 도시와 협력 → 광역경제권의 형성(MCR: Mega-City Region)

→ 협력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

→ 경쟁력 있는 글로벌광역경제권의 형성이 필수요건

#### < 40대 글로벌 광역대도시권 >

- 세계 인구의 1/6
- 세계GDP의 60%, 세계기술혁신의 85%



## 현행 "5+2" 광역경제권의 한계

### ■ 실제 생활권과 관계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

- 기존의 행정권역을 기계적으로 획정

\* 인위적인 광역권설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작동이 불가능



"5+2" 광역경제권

| 구분     | 해당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권    | 서울특별시(0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기·강원권 | 인천광역시(032), 경기(031), 강원(033)                      |
| 충청권    | 대전광역시(042), 충남(041), 충북(043)                      |
| 영남권    | 부산광역시(051), 대구광역시(053), 울산(052), 경남(055), 경북(054) |
| 호남·제주권 | 광주광역시(062), 전북(063), 전남(061), 제주(064)             |

KT의 광역전화통화권역 구분

5

## 현행 "5+2" 광역경제권의 한계

### ■ 규모의 경제를 취하기에는 소규모

- 기존의 행정구역을 과도하게 의식 → 진정한 의미의 "광역"이 되지 못함

|     | 국토면적                       | 광역경제권 수 | 비고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일본  | 377,915 (km <sup>2</sup> ) | 8개      |           |
| 프랑스 | 643,801 (km <sup>2</sup> ) | 6개      |           |
| 영국  | 243,610 (km <sup>2</sup> ) | 9개      |           |
| 한국  | 99,720 (km <sup>2</sup> )  | 7개      | 5+2 광역경제권 |



6

## 실질적으로 작동가능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

### ▪ 작동가능한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조건

#### (i)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의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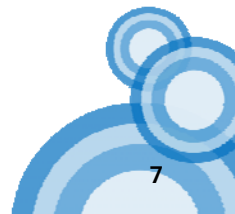
- 광역경제권은 대도시 + 중소도시 + 농촌도시가 '기러기편대'를 형성하여야 함
- 여기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가 편대장의 역할을 하여야 함

#### (ii) 시장기능(Market Mechanism)이 작동할 수 있는 경제단위

-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배후 시장이 필요

#### (iii) 반나절 이내의 단일 생활권

- 고속(혹은 급행) 교통수단을 활용한 지역간 접근성 구축



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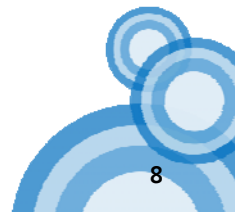
## 실질적으로 작동가능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

### ▪ 현 국토여건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지역은 수도권

-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존재
- 2,4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배후시장
- 지하철, 전철 등으로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음

### ▪ 최근 고속교통수단의 확장으로 수도권의 공간범역이 빠르게 확산 중

- 이미 충청권 북부지역과 강원권 동부지역은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됨
  - \* KTX개설로 천안·아산 등의 충청지역이 30분대 출퇴근 지역
  - \* 경춘선·경춘 고속도로로 인해 춘천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편입 등
- 현재 건설 및 계획중인 도로나 철도가 완공될 경우 충청권 강원권 대부분이 수도권화
  - \* 세종시와 관련된 교통확충사업 (제2경부고속도로 등)
  - \* 서울-강릉을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
  - \*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고속철도 및 도로 확충사업
  - \* 서울-분당-충주 전철확장 사업 등



8

##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서 '중부경제권' 구축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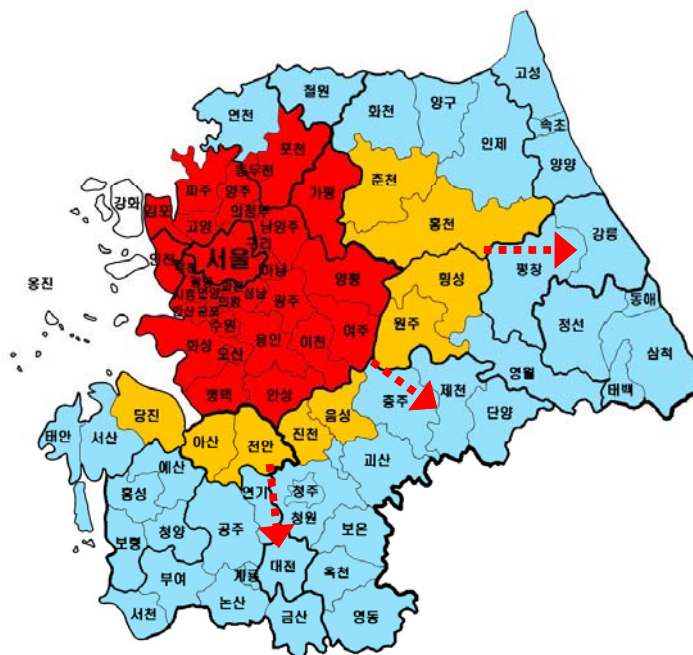
### ■ 수도권 외연적 확산현상을 감안할 때 충청권 및 강원권을 포괄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서 '중부경제권' 개념의 설정이 필요

-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확대된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

- \*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권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권으로서 기능하고 있음
- \* 기존의 교통시스템 및 협의체 정비를 한다면 수도권-강원권-충청권이 '중부경제권'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능
- \* 이러한 중부경제권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9

##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 및 중부경제권



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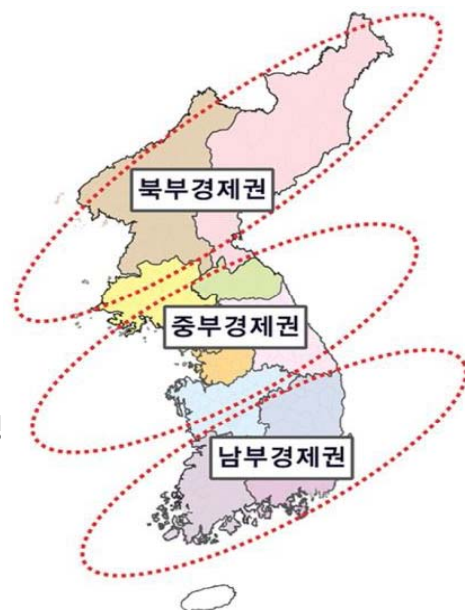
## II.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구상



### 중부경제권의 공간적 범위

#### ■ 중부경제권의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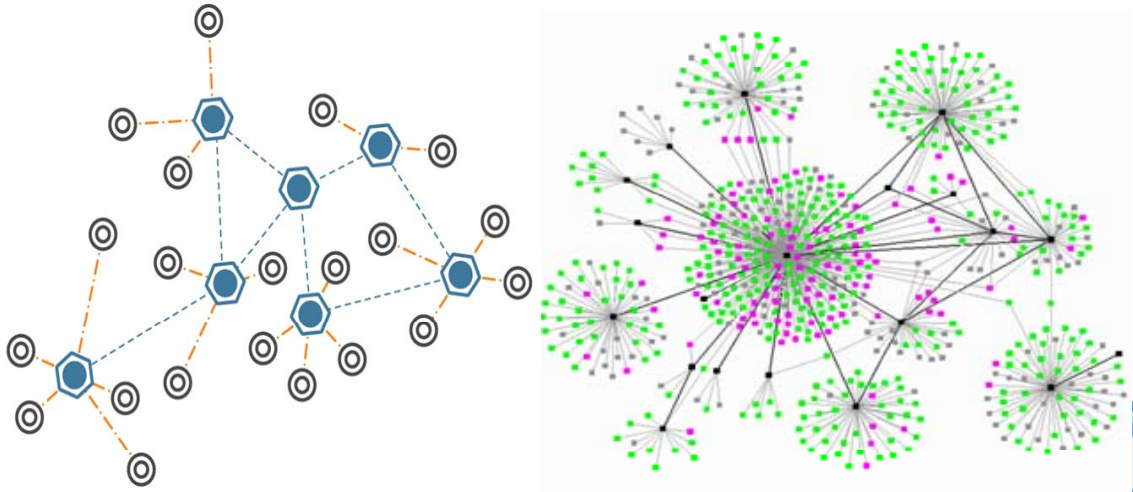
- 한반도를 구성하는 3개 광역경제권의 하나
  - \* 북부경제권 - 중부경제권 - 남부경제권
- 기존계획권역 중 3개 권역의 통합
  - \* 수도권 + 충청권 + 강원권
- 1특별시, 2광역시, 1특별자치시, 4도로 구성
  - \* 서울특별시
  - \* 인천광역시, 대전광역시
  - \* 세종특별자치시
  - \* 경기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강원도



##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

### ▪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'네트워크형 공간구조'로 구축

- 대도시-중소도시-농촌지역 등이 그물망 형태로 상호 연계



13

### ▪ 중부경제권의 도시권 체계

- 2 대도시권 → 서울대도시권, 대전-세종-청주 대도시권
- 2 중도시권 → 천안-아산권, 원주-충주권
- 7 소도시권 → 춘천권, 서산권, 포천·동두천권, 보령·홍성권, 강릉권, 동해·삼척권, 속초권



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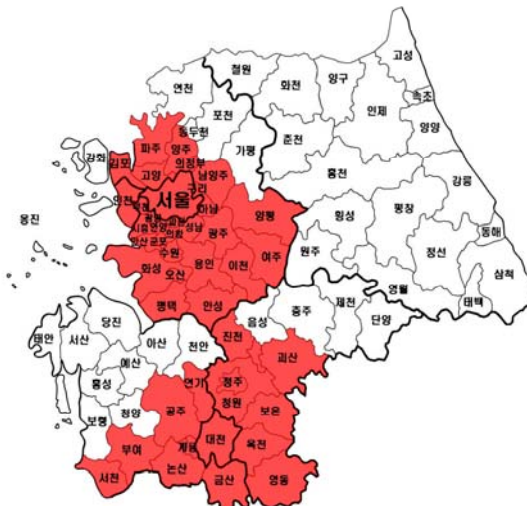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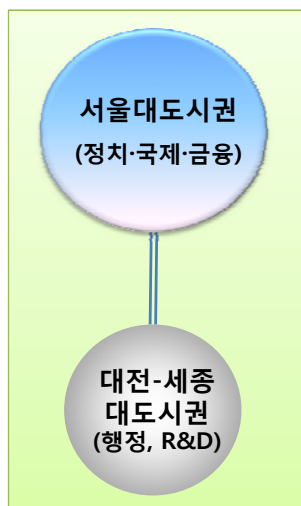
## ■ 중부경제권 도시권 구성

| 도시권  | 중심도시        | 배후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구(천명)     | 면적(km <sup>2</sup> )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대도시권 | 서울·인천·수원·고양 | 성남시, 용인시, 과천시, 부천시, 구리시, 하남시, 남양주시, 의정부시, 과천시, 군포시, 의왕시, 광명시, 파주시, 김포시, 양주시, 광주시, 포천시, 화성시, 오산시, 안산시, 시흥시, 안양시, 이천시, 양평군, 여주군, 안성시, 평택시 | 24,571,900 | 10,186               |
|      | 대전·세종·청주    | 계룡시, 논산시, 연기군, 공주시, 청원군, 보은군, 증평군, 진천군, 괴산군, 옥천군, 영동군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153,602  | 8,281                |
| 중도시권 | 천안아산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22,864    | 1,127                |
|      | 원주충주        | 제천시, 음성군, 영월군, 횡성군, 단양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67,994    | 6,165                |
| 소도시권 | 춘천          | 가평군, 홍천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76,782    | 6,955                |
|      | 서산          | 당진군, 태안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8,618    | 1,941                |
|      | 포천동두천       | 연천군, 철원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48,416    | 2,393                |
|      | 보령홍성        | 예산군, 청양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14,967    | 2,034                |
|      | 강릉          | 평창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2,125    | 2,504                |
|      | 동해삼척        | 태백시, 정선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9,191    | 2,890                |
|      | 속초          | 고성군, 양양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2,343    | 1,394                |
| 소도읍권 | 강화군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7,104     | 411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웅진군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,739     | 172                  |

15

## ■ 대도시권 체계 → 1핵, 1부핵 대도시권

- 1핵에는 서울, 인천 및 서울주변 경기도 도시들이 해당 (서울 대도시권)
  - \* 1핵은 고차위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심 도시권
- 1부핵은 대전, 세종, 청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해당됨
  - \* 부핵은 서울 대도시권의 기능을 분담하는 중부경제권의 중심축



16

## ■ 중도시권 체계 →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중규모 도시권

- 인구 50만~100만 미만의 2개 중도시권
  - \* 천안·아산권, 원주·충주권
- 중도시권은 지방 중규모 도시권으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
  - \* 1핵, 1부핵의 대도시권과 연계 및 주변 소도시권의 중심지 역할
  - \* 특화기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



17

| 중도시권   | 기 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천안·아산권 | -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지향<br>* 기초·응용과학 연구 특구<br>* 디스플레이와 IT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 조성<br>-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특화산업 육성<br>* 과학벨트 조성 |     |
| 원주·충주권 | - 의료산업 및 R&D클러스터 조성<br>* 바이오산업의 연계 사업 추진<br>*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기반 조성<br>- 레저스포츠, 의료 휴양관광산업의 연계 모색          |     |

18

## ■ 소도시권 체계 → 주변지역의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도시권

- 인구 50만 이하의 7개 소도시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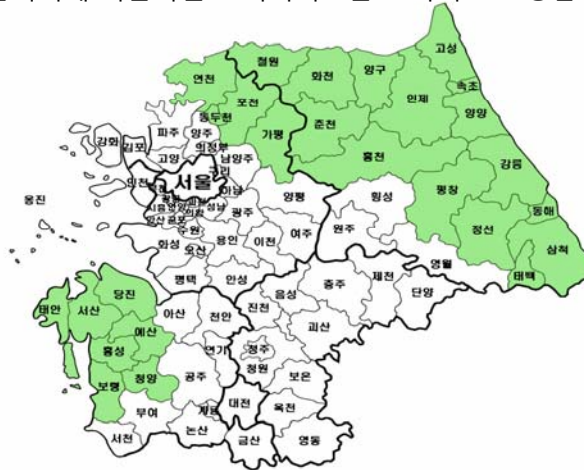
\* 포천동두천권

\* 춘천권, 속초권, 강릉권, 동해·삼척권

\* 서산권, 보령·홍성권

- 소도시권들은 낙후지역인 주변 농촌지역들의 생활중심지 역할을 수행

\* 주변 농촌지역에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



19

| 소도시권    | 기 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포천·동두천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의 청정환경, 향토문화, 접경지역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·활용하여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활성화</li> <li>* 저탄소 녹색관광의 활성화</li> <li>- 전통 제조업(가구, 섬유)구조고도화 추진 및 슬로우푸드, 평화·안보 클러스터 조성</li> <li>* 평화산업단지 조성</li> </ul>          |
| 서산권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태안-서산-당진-아산-천안 북부축을 중심으로 내륙 및 첨단신산업 복합지대 형성</li> <li>* 천안아산과 함께 환황해경제권의 생산 및 교역거점,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</li> <li>-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</li> <li>*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 지대로 육성</li> </ul> |
| 보령·홍성권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 중추행정 중심축,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</li> <li>- 세종시-공주-청양-보령의 중부축을 중심으로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·관광·물류지대 육성</li> <li>*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및 해양휴양·관광의 메카</li> <li>* 연안개발 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|

20

| 소도시권   | 기 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춘천권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DMZ부근에 지오파크 추진</li> <li>* 지오파크 인근 지역 평화빌리지 조성</li> <li>- 레저스포츠 및 관광객 이용시설과 문화관광 축제의 융·복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릉권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철금속 클러스터와 탄광지역의 희소금속산업 클러스터의 연계</li> <li>* 『Global Top Stem material의 거점지대』를 조성</li> <li>* 풍부한 광물자원과 희소금속산업의 육성</li> <li>-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 특화계획 수립</li> <li>*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</li> </ul> |
| 속초권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양공항의 2018년 평창올림픽 지정공항으로서의 역할 증대</li> <li>* 양양국제공항의 북방진출 거점 공항화</li> <li>- 해양관광거점 도시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</li> <li>* 연어를 중심으로 연어산업을 집중 육성</li> <li>* 계절별 축제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</li> </ul>     |
| 동해.삼척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에너지 소비변화를 반영한 녹색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</li> <li>* 수소융합 연구 생산 클러스터 조성</li> <li>* 석탄에너지 클러스터 조성</li> <li>- 환동해권 해양물류 도시로 발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III. 중부경제권의 위상 및 역할

## 중부경제권의 위상

### ■ 중부경제권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경제 중심지

- 중부경제권은 한반도 전체 총생산(GDP)의 약 61%를 차지

\* 면적은 20%, 인구는 42%를 차지

|        | 인구(명)                  | 면적(km <sup>2</sup> )  | 인구밀도   | GRDP(백만원)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반도경제권 | 72,110,388<br>(100.0%) | 223,350.2<br>(100.0%) | 484.8명 | 1,172,742,223<br>(100.0%) |
| 중부경제권  | 30,349,803<br>(42.1%)  | 45,277.6<br>(20.3%)   | 670.3명 | 728,763,554<br>(60.9%)    |
| 남부경제권  | 17,698,585<br>(24.5%)  | 53,086.0<br>(23.4%)   | 333.4명 | 433,509,939<br>(36.2%)    |
| 북부경제권  | 24,062,000<br>(33.4%)  | 123,138.0<br>(56.3%)  | 195.4명 | 24,236,800<br>(2.9%)      |

자료: 국가통계포털(Kosis), 2010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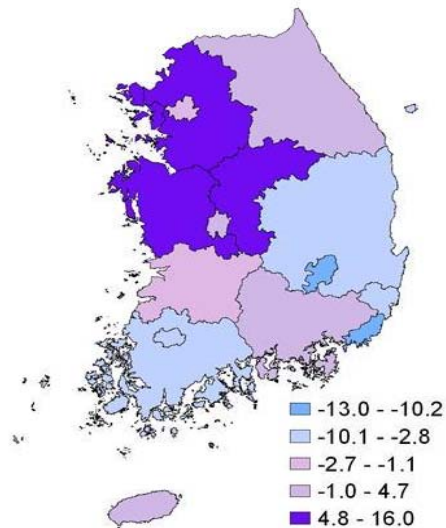
23

### ■ 중부경제권은 2040년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

- 향후 인구감소시대 도래에도 불구하고 중부경제권만 유일하게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

\* 인구밀도가 670.3명으로 남부경제권의 2배, 북부경제권의 3.4배에 달함

2010년 대비 2040년 인구증가율(%)



자료: 통계청(2012) 2010~2040 인구변화 추계

24

## ▪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글로벌급 광역경제권

- 중부경제권의 인구규모는 캐나다와 비슷하며 세계36위권 규모
- 중부경제권의 총GDP규모는 네덜란드와 유사하며 세계 17위권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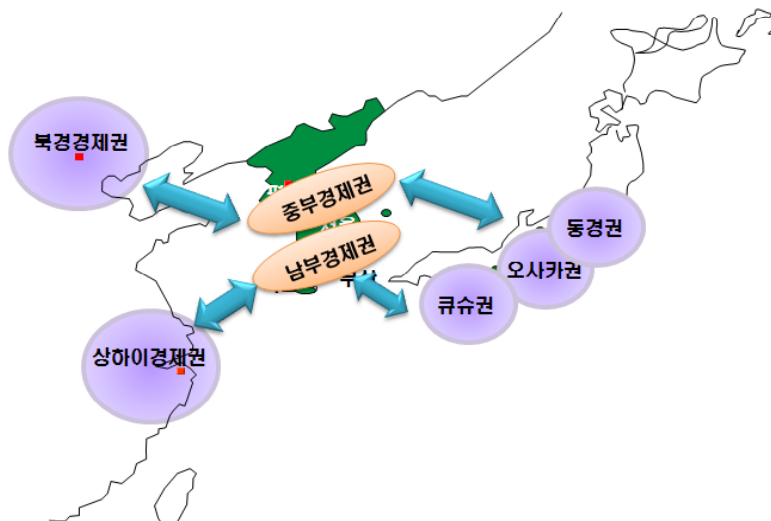
## 중부경제권의 기능 및 역할

### ▪ 동북아 중심지 기능

- 중부경제권은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 동북아 거점 및 글로벌 관문 역할을 담당

\* 중부경제권은 중국의 북경경제권, 일본의 동경경제권 등과 경쟁

→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



## 중부경제권의 기능 및 역할

### ▪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지식·창조경제 선도기능

- 세계는 지식·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동 중
  - \* 지식·창조경제는 지식에 기반한 창조성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
  - \* 2002년 이후 연평균 14% 고속성장
- 중부경제권은 다양한 지식·창조경제의 기반 및 자원을 갖춘 지역
  - \*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70% 이상, 전체 투자액의 75%, 전체 특허의 80% 이상
- 중부경제권이 한국의 창조경제를 주도하여 "제2의 한강의 기적"을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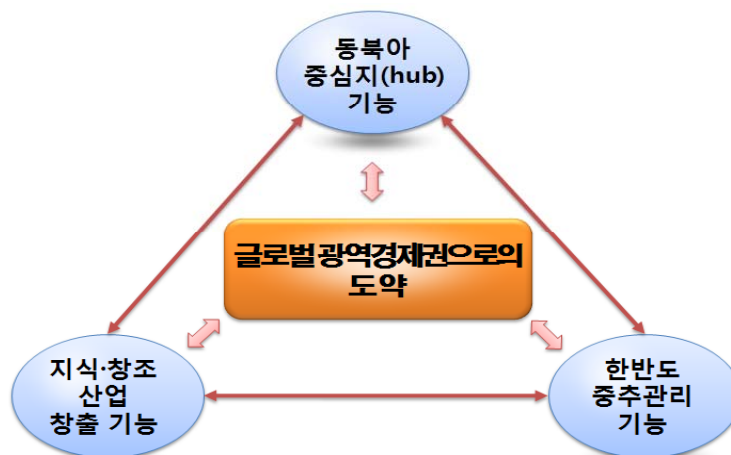
|      | 산업경제                   | 정보경제                    | 창조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제위기 | 오일쇼크<br>(1970~80년대)    | IMF외환위기<br>(1990년대)     | 글로벌 금융위기<br>(2008년~)         |
| 성장동력 | 토지, 노동, 자본             | 지식, 정보                  | 상상력, 창의성                     |
| 주력산업 | 중화학공업<br>(자동차, 조선, 철강) | IT산업<br>(가전, 반도체, 정보통신) | 창조산업<br>(서비스, 예술, 콘텐츠)       |
| 성공신화 | 한강의 기적                 | IT강국 코리아                | Creative 코리아<br>(제2의 한강의 기적) |

27

## 중부경제권의 기능 및 역할

### ▪ 한반도 중추관리 기능

- 한반도의 정치·행정 중심지 기능
- 대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지원 기능 → '북부경제권'의 형성을 지원
- 지역균형개발 지원 기능 → '남부경제권'의 형성을 지원



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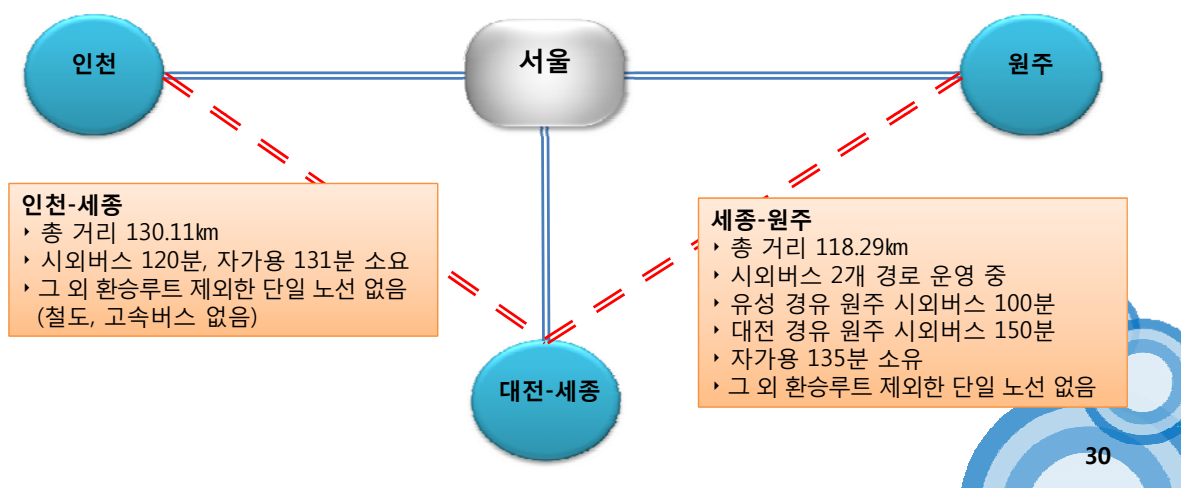
## IV. 중부경제권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



### 광역인프라정비: 반나절 생활권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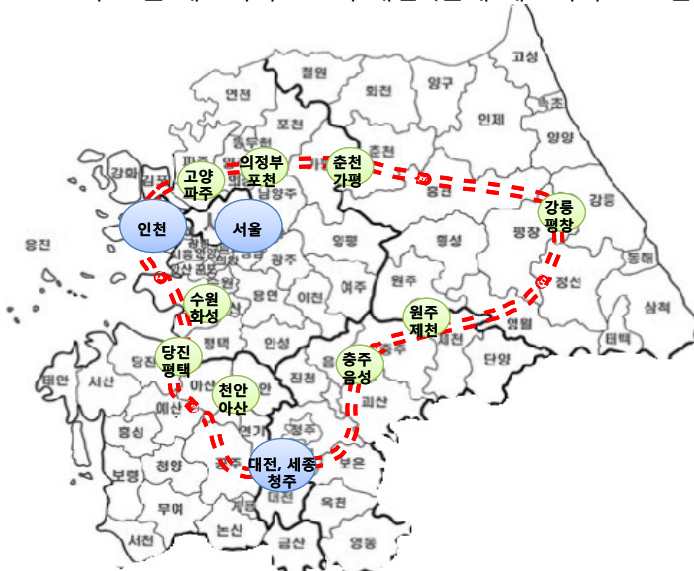
#### ▪ 주요 거점간 연계교통망을 정비하여 반나절 생활권 구축

- 서울권과의 접근성은 우수
  - \* 서울-대전, 서울-원주, 서울-인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로 연계
- 대전·세종권과 인천권 및 강원권간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
  - \* 신설보다는 기존 교통망의 연계성 강화 및 확충 또는 고속화



## · [가칭] '중부권 외곽순환도로' 의 구축

- 중부경제권의 주요 거점들을 연결하는 '중부권 외곽순환도로'의 연계 구축
- \* 기존 구간의 활용 및 단절구간 도로망의 정비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구축
- \* 중부경제권 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만나질 생활권화
- \* 수도권 제3 외곽도로의 개념 (현재 제2 외곽도로 건설 중)



수도권 제1, 제2 외곽순환도로

31

## 동북아 중심지 기능 강화

### ● 중부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

#### ▪ 중부경제권 내에는 4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음

- ✓ 기 지정 경제자유구역 →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, 황해경제자유구역(YESFEZ)
- ✓ 지정 예정 경제자유구역 → 충북(오송) 경제자유구역,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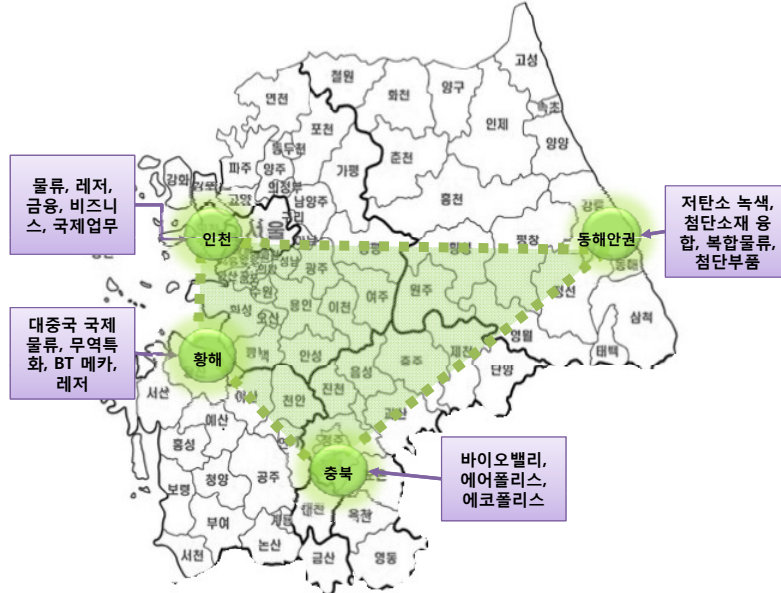


| 구분  | 추진기간      | 면적                   | 사업비    | 외자유치실적<br>(목표액)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인천  | 2003~2020 | 170km <sup>2</sup>   | 78.0조원 | 19.3억불(91억불)    |
| 황해  | 2008~2020 | 16km <sup>2</sup>    | 4.7조원  | 0.1억불(18억불)     |
| 동해안 | 2012~2023 | 8.61km <sup>2</sup>  | 1.1조원  | -(30억불)         |
| 충북  | 2013~2020 | 10.77km <sup>2</sup> | 2.9조원  | -(20억불)         |

32

▪ 동북아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필수적

- ✓ 특히 4개 경제자유구역의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→ (가칭) '중부권 EFZ 트라이앵글' 구축
- ✓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및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기능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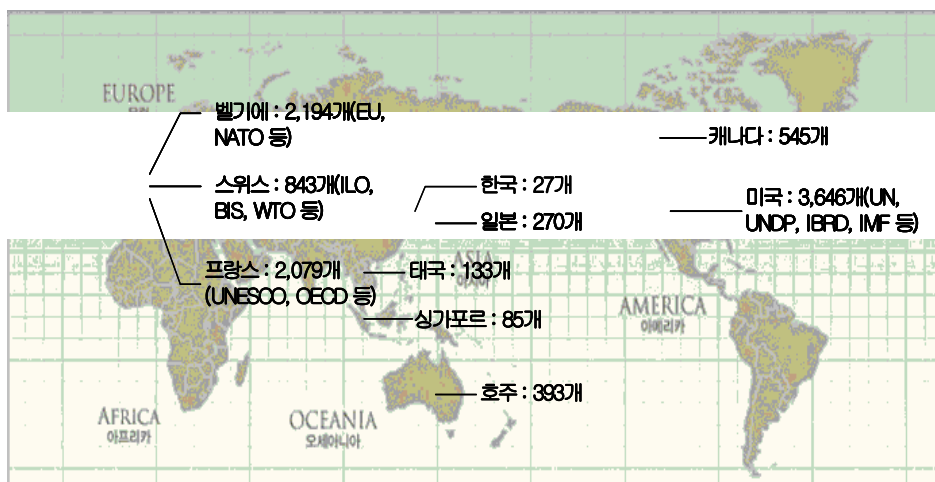
33

▪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위한 규제 완화

- ✓ 외국기업의 구성원과 인재가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
- ✓ 각종 국제컨벤션을 유치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
- ✓ 국내기업의 진입규제를 장기적으로 축소 및 폐지

▪ (가칭) '중부권 통합 경제자유구역청'을 신설

- ✓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합하고
- ✓ 새로이 신설될 충북경제자유구역청,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유보



34

## 지역공항의 기능 분담을 통한 활성화

### ■ 중부경제권에는 4개의 공항이 운영 중

- 허브공항 → 인천국제공항
- 지역공항 → 김포공항, 청주공항, 양양공항

| 공항 별   | 2004. 11      | 2006. 11      | 2012.11*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김포국제공항 | 2,051,652 (명) | 2,379,235 (명) | 2,814,981 (명) |
| 청주국제공항 | 64,100 (명)    | 84,943 (명)    | 120,000 (명)   |
| 양양국제공항 | 4,384 (명)     | 4,394 (명)     | 32,000 (명)    |

주: 김포공항은 2011년 11월, 청주공항은 2012년 6월, 양양공항은 2012년 11월자료

35

### ■ 국제적 경기불황 속에서도 한국은 항공여객 수 4천만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중부권공항들이 특히 선전하고 있음

- 2002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여객 추이는 연평균 7.3% 증가
- 김포공항은 국적 항공사 및 외항사의 항공여객 100%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
- 청주공항은 2002년에 비해 250%증가하여 월 이용객수 12만명 기록
- 양양공항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근 활성화에 성공하여 이용객수 3만명 기록

#### 양양공항 기적의 부활 (조선일보. 2012. 11.1)

3년 전 9개월간 승객 0→올해 3만 명으로  
몇 년 전만해도 '유령공항' 오명...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 
강원도, 파격적 유치전략 결실

양양국제공항이 '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'(영국 BBC방송 보도)으로 불렸던 적이 있다. 2008년 11월 2일부터 이듬해 8월 14일까지 9개월여 동안 단 한 편의 비행기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. 승객은 제로(0)인데 70여명의 공항 직원들만 일하는 풍경을 놓고 사람들은 '유령공항' 같다고 비아냥댔다. 경제성은 도외시한 채 지역정치 논리로 건설한 대표적인 재정낭비 사례로도 꼽혔다.

그러나 2012년 10월 30일, 같은 양양공항에는 입·출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224명이 북적거리고 있었다. 여기저기 중국어 소리로 시끌벅적 해 중국의 한 공항에 온 착각이 들 정도였다. 이 공항은 올 10월 현재 국내의 승객 2만 3300여명이 이용했고, 연말까지 총 3만20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36

## ▪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공항활성화 및 상호연계성 강화

- ✓ 김포공항 → 동북아 대도시들간의 비즈니스 셔틀공항
- ✓ 청주공항 → 중국, 일본,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저가항공 중심공항
- ✓ 양양공항 → 러시아, 중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기 중심공항



37

## 창조경제 선도기능 강화

### 중부권 R&D 산업의 경쟁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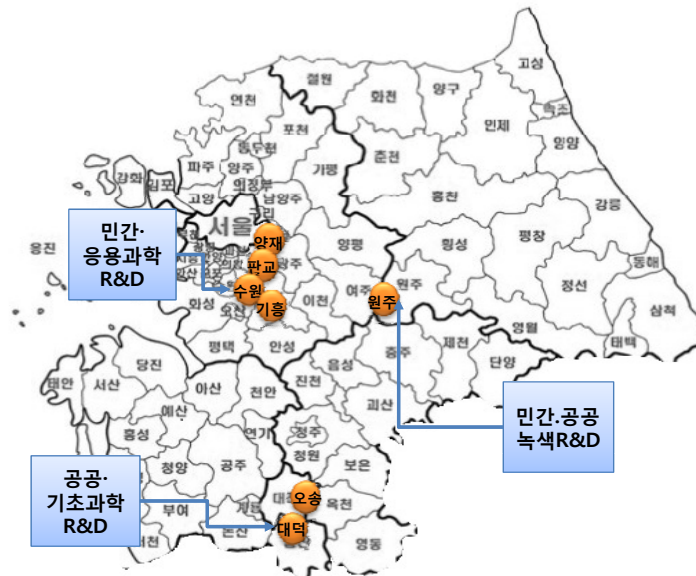
#### ▪ 중부권은 우리나라 R&D산업의 중심지

- 수도권 → 전국 총R&D의 65%를 차지
  - \* 기업R&D투자의 72%, 대학R&D 연구의 55% 차지
  - \* 다양한 R&D집적지구 존재
  - \* 서울: 마곡R&D시티, 상암DMC, 공릉동 서울테크노폴리스, 테헤란밸리, 양재밸리 등
  - \* 경기: 판교 테크노밸리, 광교테크노밸리, 안양벤처밸리, 과천지식정보타운 등
- 대전.세종.충청권 → 국가차원의 기초과학 연구중심지
  - \*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, 대덕R&D특구, 오송.오창 과학연구단지 등
  - \* 세종시: 국책연구기관 16개 이주
- 강원권 → 녹색 R&D 중심지
  - \* 원주권: 의료기기 및 바이오 R&D

38

## ■ 중부권 광역 R&D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

- ✓ 수도권 → 민간주도의 응용과학 R&D에 특화
- ✓ 대전·세종·충청권 → 국가주도의 기초과학 R&D에 특화
- ✓ 강원권 → 민간·공공 협력에 의한 녹색R&D에 특화



39

## ■ 중부권 차원의 “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계획”을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

- 중부권 소재 대기업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R&D부문의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개발전문기업화 유도
- 연구개발전문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중부권의 기초연구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주도
- 중부권내 중소, 중견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반기술을 연구개발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, 활용하도록 유도

## ■ 해외R&D센터의 유치를 위해 R&D적합지로서의 중부권의 이미지 구축 필요

- 경기도의 경우 “Global Inspiration”이라는 슬로건 하에 해외R&D의 국내투자를 독려
- 아일랜드, 인도, 중국 등은 해외R&D센터 유치를 위해 핵심슬로건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, 중부권 공통의 브랜드이미지 구축이 필요

40



## 국제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

### ■ 한국이 국제컨벤션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

-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편리한 입지적 이점으로 인해 국제 컨벤션산업이 빠르게 성장
  - \* G-20 정상회의, 핵안보 정상회의 등
- 국제협회의연합이 발표한 2011년도 세계 국제회의 개최순위
  - \* 한국은 46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점유율 4.6%를 기록하며 세계 6위 기록

|   | 가 | 2011 | 2010 |
|---|---|------|------|
| 1 | 가 | 919  | 725  |
| 2 |   | 744  | 936  |
| 3 |   | 598  | 741  |
| 4 |   | 557  | 686  |
| 5 |   | 533  | 597  |
| 6 |   | 469  | 464  |
| 7 |   | 421  | 499  |

출처: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(UIA) International Meeting Statistics 2011



### ■ 중부권이 국제컨벤션을 주도하고 있음

- 2011년의 경우 수도권(서울)은 232건의 국제회의를 개최
  - \* 도시별 순위에서 싱가포르, 라스베이거스 등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
- 향후 대전.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제컨벤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- \* 충청권(대전)의 경우 2012년 58건을 개최
  - \*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

### ■ 컨벤션산업(MICE)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

- 컨벤션산업의 경제성장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\* 컨벤션센터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'지식산업단지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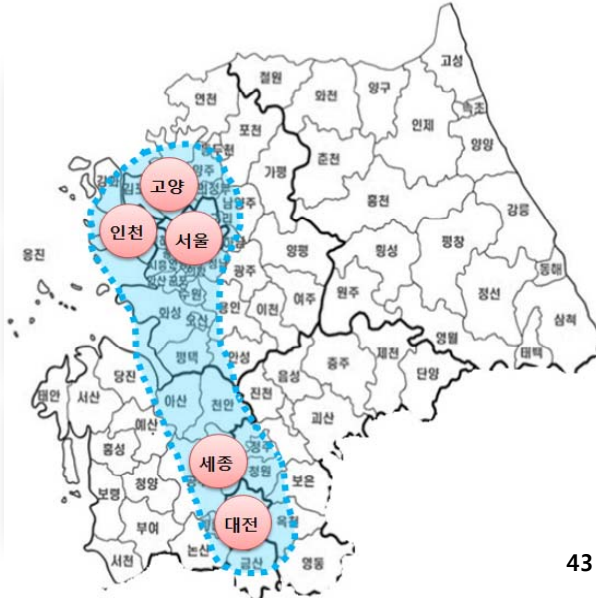
## ■ 서울-고양-인천-세종-대전을 잇는 (가칭) '중부권컨벤션벨트'를 구축

- 수도권 및 충청권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중부권 컨벤션벨트를 집중 육성

\* KINTEX, COEX, DCC(대전컨벤션센터), 송도컨벤시아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

\* 비즈니스 호텔의 확보,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육성, 인증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

### ■ 국내 전시·컨벤션 센터 현황



43

## ● 한방·양방 통합 의료관광 벨트 조성

### ■ 중부권에서 의료관광이 빠르게 성장

-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총 344,407명에 달함

\* 한국의 의료기술 발달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도 향상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

\* 외국인 환자는 2010년 224,260명에 비해 53.6% 증가

\* 전체 의료관광객의 약 90%가 중부권에 집중

- 지금까지는 성형·피부관리를 중심으로 한 양방 의료관광이 다수

\* 서울 강남지역이 전체 의료관광객의 약 64% 차지

\* 그러나 최근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

\* 따라서 한방·양방이 연계된 의료관광을 추진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



강남구의 의료특구 추진

44

## ■ 의료관광은 일반관광에 비해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음

- 의료관광에 1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

\* 생산유발효과 176억원, 부가가치유발효과 237억원, 136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

|  |       | 가가     |      |      |
|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
|  | 176억원 | 80.4억원 | 237명 | 136명 |

출처: 서정교(2011)

- 1인당 평균진료비는 149만원, 입원환자 진료비는 662만원으로 추산

- 이러한 이유로 싱가폴은 의료관광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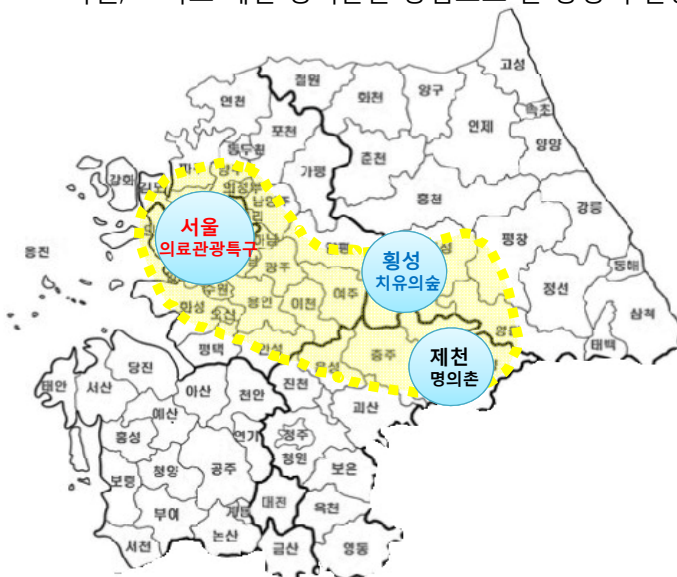


45

## ■ 중부경제권 통합의료관광 벨트 조성

- 수도권-충청권-강원권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의료관광을 연계하여 한국형 Healing 프로그램을 개발 → '통합의료관광벨트' 조성

- 서울의 성형.피부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료시설, 강원도의 치유의 숲 등 휴양형 의료관광 자원, 그리고 제천 명의촌을 중심으로 한 충청의 한방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한 코스



46



## V. 맺는 말



### 중부경제권은 글로벌 한반도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촉매제

#### ▪ 작동가능한 광역경제권의 형성이 선진국 국토전략의 핵심으로 부상

(예) 미국 → 오바마 대통령의 '대도시권국가(Metro Nation)' 전략

- 침체의 늪에 빠진 미국경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오바마 新행정부는 대도시권 국가론(Metro Nation)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
  - \* 백악관에 도시정책실(Office of Urban Policy)을 설치
  - \* 광역대도시권별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구
- 오바마 新행정부의 대도시권정책(Metro Nation Policy)의 핵심
  - \* 국가전략의 핵심인 혁신, 인적자본, 기반시설, 정주환경 등을 대도시권 단위로 계획
  - \*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대도시권으로 이양

#### ▪ 선진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부경제권을 매개로 한 '한반도경제권'을 형성하는 장기 전략이 필수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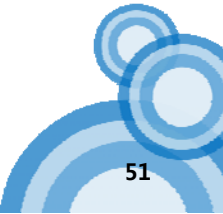


- 중부경제권의 구축은 동남권-호남권을 결합한 이른바 '남부경제권'의 형성을 자극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

\* 남한이 크게 2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 (중부경제권 및 남부경제권)으로 재편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 전체가 '북부경제권'이라 명명될 수 있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 할 수 있음

-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특화된 3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강력한 '한반도경제권'을 구축하게 됨

\* 인구 8,000만 명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경제권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높은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음



51



THANK YOU

## 발표③ : 남부경제권 구축방향

이정식 교수 (前 국토연구원장)

# 남부경제권 구축방향

2013. 1. 30

이 정 식

(前 국토연구원장 / 前 안양대학교 교수)



## 목 차

I. 구상의 개요

II.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

III.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

IV.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

V.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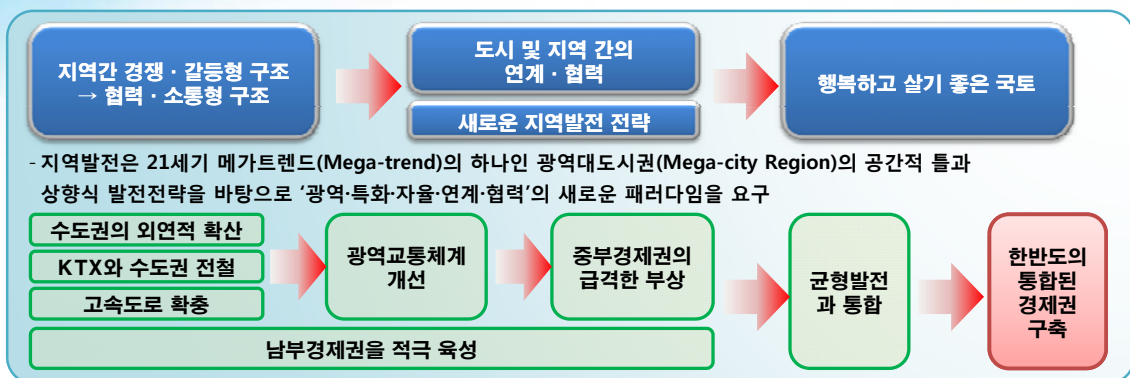


## I. 구상의 개요



### I. 구상의 개요

#### 1 구상의 배경



#### 2 구상의 내용

- 기존의 물적 계획과 종합계획의 틀을 벗어나 전략계획 차원의 발전전략을 제시
- 공간적 범위 : 전북, 광주·전남, 대구·경북, 부산·울산·경남 포함
- 내용적 범위 :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를 토대로 대·중·소 도시권의 주요 기능과  
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

## II. 국토의

##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

### 도시인구의 분포

- 市級 도시인구(인구 10만 명) 비율 : 2000년 87% → 2010년 90%  
(2030년 경에는 전 국토가 하나의 거대도시권(One Metro-nation)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)
- 수도권 인구비중 : 2000년 46.3% → 2010년 49.1%
-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총인구 : 2000년 73% → 2010년 76%

| 도시<br>규모별<br>시 인구(명) | 2000년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2005년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2010년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수          | 인구         | 비율<br>(%) | 수          | 인구         | 비율<br>(%) | 수          | 인구         | 비율<br>(%) |
| 10~30만               | 39         | 6,679,797  | 14        | 41         | 7,465,090  | 16        | 36         | 6,957,504  | 14        |
| 30~50만               | 13         | 4,559,545  | 10        | 12         | 4,603,299  | 10        | 11         | 4,306,560  | 9         |
| 50~100만              | 10         | 6,766,410  | 15        | 10         | 6,914,030  | 15        | 11         | 7,828,304  | 17        |
| 100만이상               | 7          | 22,249,250 | 48        | 8          | 23,293,442 | 49        | 9          | 24,508,286 | 50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| 69         | 40,255,002 | 87        | 71         | 42,275,861 | 90        | 67         | 43,600,654 | 90        |
| 전국인구                 | 46,136,101 |            |           | 47,278,951 |            |           | 48,580,293 |            |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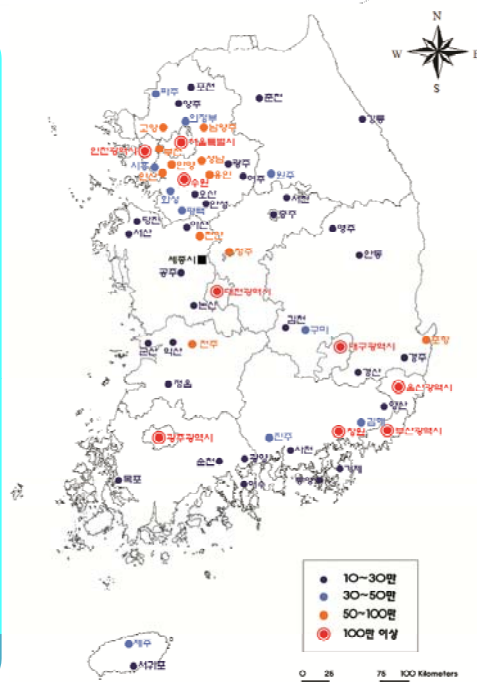
인구규모별 도시 수 및 비율 (자료: 통계청)

7

##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

###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

- 지난 10년간 중소도시보다 인구 50만명 이상  
중규모 도시의 성장이 더욱 빠름
- 강원도와 충남 서부, 전북의 동남부, 전남의  
중남부, 경북의 중북부, 경남의 서북부 지역  
등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규모  
이상의 도시가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음



인구규모별 도시 분포(2010)

8

### 3 수도권 외연적 확산과 중부경제권의 부상

- 『수도권정비계획법(1994)』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입지, 대학, 공공 청사, 대규모 관광단지 등에 대한 차등규제 → 충청권 등으로 개발이 확산
- 수도권 전철의 연장 : 서울~천안·아산은 직접적 생활권
  - KTX 개통 : 서울~대전 반나절 생활권
  -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,경기~원주·평창 등의 접근성 제고(서울~강릉·속초 3시간)

- 수도권과 대전·충청·강원 등이 단일 생활권·단일 경제권으로 부상
- 서울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산, 고속교통 수단의 개통과 간선교통망의 개선
  - 서울·인천·대전·경기·강원·충청 등을 중부경제권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
  - 중부경제권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남부경제권의 육성이 향후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



###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

#### 1)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인구와 경제 연왕(2010)

- 남부경제권의 면적은 53,086km<sup>2</sup>(전국의 53.1%), 인구는 17,698천명(전국의 36.4%)
- 남부경제권의 지역 내 총생산(GRDP)은 중부경제권의 59.5%에 불과
  - 수출 실적은 남부경제권이 중부경제권보다 약간 높음(철강, 자동차, 조선, 석유화학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 분포)

| 경제권    | 시·도 | 면적(km <sup>2</sup> ) | 인구(천명)          | GRDP(10억원)         | 제조업종사자(천명)     | 서비스업종사자(천명) 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중부 경제권 | 서울  | 605                  | 9,794           | 271,649            | 273            | 2,637          |
|        | 인천  | 1,029                | 2,663           | 56,857             | 219            | 354            |
|        | 대전  | 540                  | 1,502           | 26,413             | 51             | 274            |
|        | 경기  | 10,167               | 11,379          | 232,429            | 1,036          | 1,709          |
|        | 강원  | 16,693               | 1,472           | 28,829             | 43             | 267            |
|        | 충북  | 7,433                | 1,512           | 36,233             | 144            | 231            |
|        | 충남  | 8,630                | 2,028           | 76,354             | 217            | 295            |
| 소 계    |     | 45,097(45.1%)        | 30,350 (62.5%)  | 728,764 (62.1%)    | 1,983 (58.0%)  | 5,767 (66.6%)  |
| 남부 경제권 | 부산  | 767                  | 3,145           | 59,531             | 194            | 582            |
|        | 대구  | 884                  | 2,446           | 35,632             | 155            | 377            |
|        | 광주  | 501                  | 1,476           | 25,140             | 75             | 252            |
|        | 울산  | 1,059                | 1,083           | 59,160             | 144            | 173            |
|        | 전북  | 8,067                | 1,777           | 34,643             | 99             | 278            |
|        | 전남  | 12,247               | 1,741           | 58,750             | 93             | 262            |
|        | 경북  | 19,028               | 2,600           | 78,314             | 273            | 384            |
|        | 경남  | 10,533               | 3,160           | 82,341             | 390            | 471            |
| 소 계    |     | 53,086(53.1%)        | 17,698 (36.4%)  | 433,511 (37.0%)    | 1,427 (41.7%)  | 2,779 (32.1%)  |
| 제주     |     | 1,849 (1.8%)         | 532 (1.1%)      | 10,469 (0.9%)      | 9 (0.3%)       | 115 (1.3%)     |
| 합계     |     | 100,033(100.0%)      | 48,580 (100.0%) | 1,172,742 (100.0%) | 3,418 (100.0%) | 8,662 (100.0%) |

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사회·경제 현황(2010, 통계청, 국토해양부)

##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

### 2)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격차 심화

- 중부경제권은 남부경제권에 비해 인구, 지역 내 총생산(GRDP), 서비스업 종사자수 등의 분야에서 집중현상이 지속 (2005~2010년 기준)
- 이러한 격차는 생산자 서비스산업(Producer's Services)의 증가,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입지 등 경제적 중추기능 뿐만 아니라, 인구와 고급 일자리 등의 쏠림 현상이 향후에도 중부 경제권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
| 구분  | 인구 비중 |       | GRDP 비중 |       | 제조업 종사자 비중 |       |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|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년도  | 2005  | 2010  | 2005    | 2010  | 2005       | 2010  | 2005        | 2010  |
| 중부권 | 61.4  | 62.5  | 61.6    | 62.1  | 59.1       | 58.0  | 65.7        | 66.6  |
| 남부권 | 37.5  | 36.4  | 37.4    | 37.0  | 40.6       | 41.7  | 33.0        | 32.1  |
| 제주  | 1.1   | 1.1   | 1.0     | 0.9   | 0.3        | 0.3   | 1.3         | 1.3   |
| 계   | 100.0 | 100.0 | 100.0   | 100.0 | 100.0      | 100.0 | 100.0       | 100.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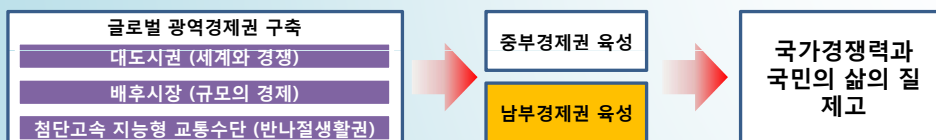
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사회·경제지표 변화(자료 : 통계청, %)

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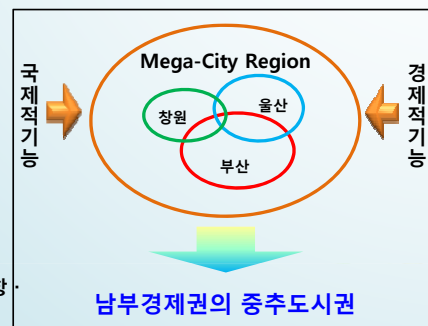
##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

### 3)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대두

- 중부경제권과 함께 남부경제권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구축이 시급



-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Mega-city Region에 해당하는 대도시권에 국제적·경제적 기능과 도시 기능을 강화 →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권으로 육성
  - 대·중·소 도시권 체계를 구축 → 도시 및 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연계·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제고
  - 부산·울산·창원 대도시권의 성장동력을 확산시켜 남부경제권의 통합 기반을 구축(대구·구미, 광주·나주, 전주·익산·군산, 포항·경주, 광양만, 진주·사천 등 다핵도시권으로 확산)



12

## Ⅲ.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



### Ⅲ.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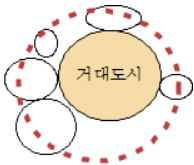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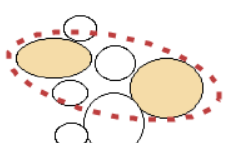


####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

##### 1) 도시권의 개념 및 유형

 도시권은 중심도시 및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배후지역으로서 통근권 및 경제권, 일상생활권 등을 토대로 한 일체화된 기능지역을 의미

- 학자나 지역정책에 따라 city-region, super-region, mega-region, metropolitan-area 등으로 불림
- 최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의 육성 차원에서 Mega-city Region(MCR)이 자주 인용되고 있음

| 유형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형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형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하나의 거대도시가 주변의 배후지역을 경제·정치적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도시권으로 발전한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담도시 형태의 거대도시 지역으로서 인접한 도시의 배후지역이 공간적으로 중첩 또는 수렴되는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접한 중심도시들이 상호 협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혹은 제휴하는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국 뉴욕, 영국 런던, 일본 도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네덜란드 Randstad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레순(Øresund)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덴마크 코펜하겐</li> <li>- 스웨덴 말뫼(Malmö) 초광역권의 초국적 연계형태</li> </ul> |



##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

### 2) 도시권의 중요성 대두

21세기에는 규모 및 네트워크 경제(Economy of Scale & Network)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별 도시보다는 도시권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임



이 구상에서는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 분석을 토대로 주요 도시권의 기능과 발전 전략을 제시

15



##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

### 1) 도시권 설정 사례

도시권의 설정 사례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‘광역도시계획’에서 11개의 ‘광역도시권’
- 『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‘광역권개발계획’에서 10개의 ‘광역권’
- 『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른 ‘광역교통기본계획’에서 5개의 ‘대도시권’

기존의 도시권 권역설정의 문제점

-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책적 요인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통근·통학, 업무통행, 여가, 쇼핑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함

### 2) 도시권 설정지표 검토

도시간의 연계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통근·통학률을 중심으로 남부경제권의 도시 체계를 분석

- 통근·통학 관련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0% 표본조사자료(통근·통학)를 이용
-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모도시를 기준으로 주변지역과의 상호 통근·통학률이 5% 이상인 권역을 고려

16



##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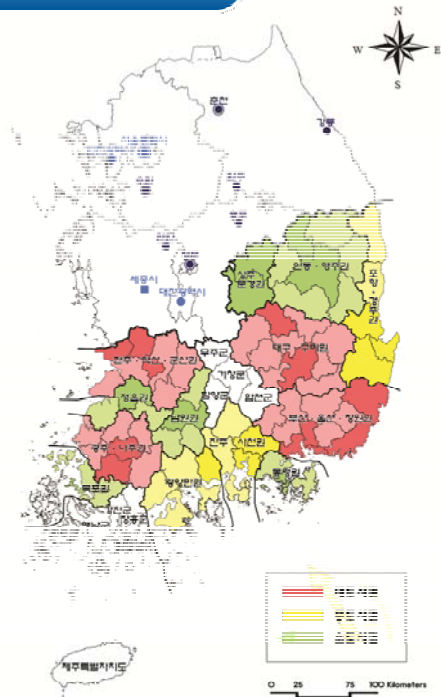
### 3) 대·중·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(대도시권)

**대도시권**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중심도시 또는 연담도시를 대상으로 설정

- 부산·울산·창원, 대구·구미, 광주·나주, 전주·익산·군산 등 4개
- 주요 기능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'경쟁거점도시권'의 역할과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 기능을 수행

| 도시권  | 중심도시   | 배후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구<br>(천명) | 면적(km)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대도시권 | 부산울산창원 | 김해 양산 밀양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           | 6,543      | 5,760  |
|      | 대구구미   | 경산 김천 영천 청도군 군위군 성주군<br>고령군 칠곡군 | 3,579      | 6,610  |
|      | 광주나주   |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           | 1,776      | 3,746  |
|      | 전주익산군산 | 김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             | 1,469      | 4,362  |
|      | 소계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,367     | 20,478 |
| 총계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,698     | 53,086 |

남부경제권의 대도시권별 인구(2010)



남부경제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

17



##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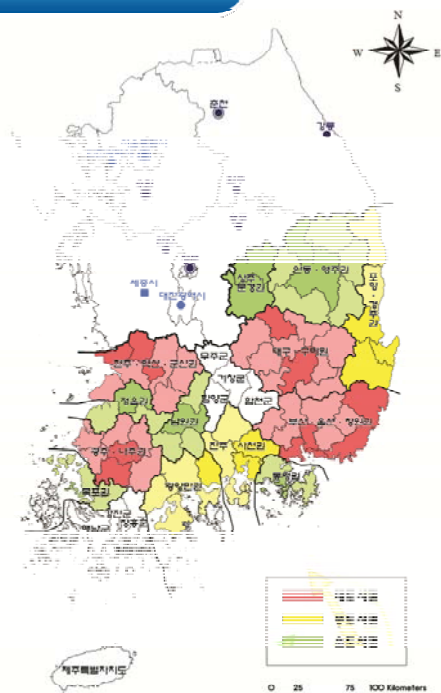
### 3) 대·중·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(중도시권)

**중도시권**은 인구 30~100만 명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설정

- 포항·경주, 광양만, 진주·사천 등 3개
- 주요 기능은 '성장거점도시권'으로 육성하되 주변의 대도시권과 연계하여 남부경제권의 경제성장을 견인

| 도시권  | 중심도시  | 배후지역                 | 인구<br>(천명) | 면적(km <sup>2</sup> )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중도시권 | 포항·경주 | 영덕군, 울진군             | 852        | 4,184                |
|      | 광양만   | 여수, 순천, 광양, 보성군, 고흥군 | 771        | 3,316                |
|      | 진주·사천 | 하동군, 산청군, 남해군        | 564        | 2,939                |
|      | 소계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,187      | 10,439               |
| 총계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7,698     | 53,086               |

남부경제권의 중도시권별 인구(2010)



남부경제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

18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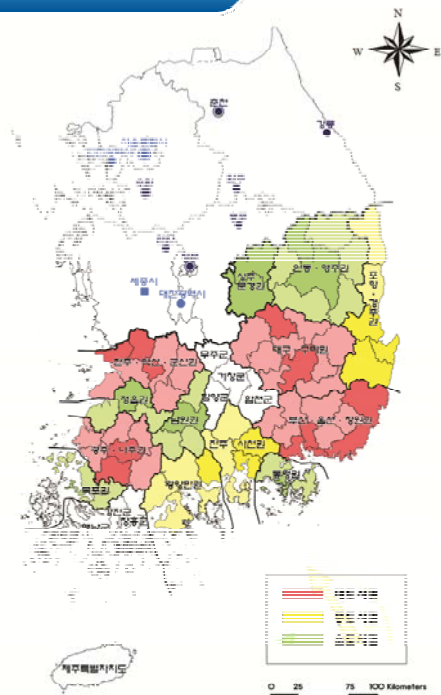
##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

### 3) 대·중·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(소도시권)

- 소도시권**은 인구 10만~30만 명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설정
  - 안동, 상주, 통영, 정읍, 남원, 목포 등 6개
  - 주요 기능은 성장거점의 역할 및 '자립거점도시권'으로 육성하여 자립적 발전과 연계·협력발전을 도모
- 소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규모 10만 명 이하의 소도읍**
  - 9개는 별도로 육성(무주, 거창, 함천, 함양, 해남, 강진, 장흥, 진도, 완도 등)
  - 각 지역의 향토자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확대

| 도시권  | 중심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후지역                    | 인구(천명) | 면적(km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소도시권 | 안동·영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성군, 청송군, 예천군, 영양군, 봉화군 | 441    | 6,899  |
|      | 통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거제, 고성군                 | 412    | 1,158  |
|      | 목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암군, 무안군, 신안군           | 410    | 1,765  |
|      | 정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창군, 순창군                | 189    | 1,796  |
|      | 상주·문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167    | 2,167  |
|      | 남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수군, 구례군, 곡성군           | 149    | 2,277  |
|      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1,768  | 16,062 |
| 소도읍  | 거창, 함천, 함양, 무주, 해남, 강진, 장흥, 진도, 완도 |                         | 376    | 6,107  |
|      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376    | 6,107  |
| 총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17,698 | 53,086 |

남부경제권의 소도시권 및 소도읍 도시권별 인구(201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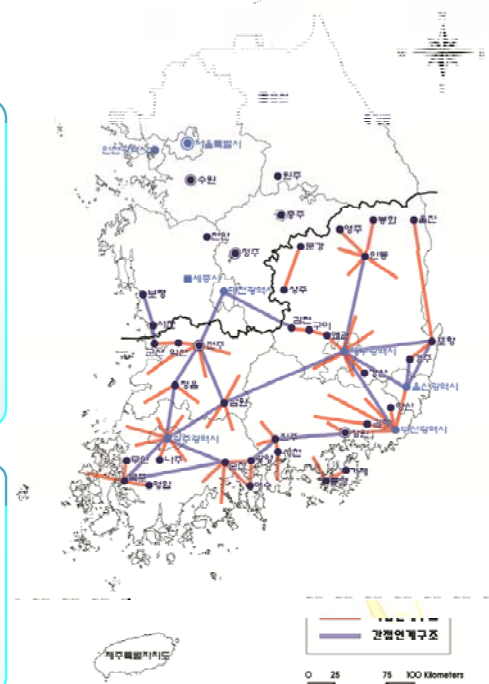
남부경제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



##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

### 4) 다핵도시의 연계 체계

- 도시 간 직접 및 간접 연계구조**
  - 도시권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상호 통근·통학률이 5% 이상인 권역의 도시 간 연계는 직접적인 동일생활권인 동시에 동일경제권
  - 상호 통근·통학률이 5% 이상인 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도시 간 여객 및 화물통행량 연계 정도와 산업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 간의 간접적 연계 정도를 파악
- 도시 및 지역 간 연계·협력사업**
  - 연계·협력사업은 도시 간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대·중·소도시 권 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
  - 간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타 도시권과의 협력사업도 2차적으로 고려



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 연계체계

## IV.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



### IV.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

#### 1 남부경제권 발전의 비전과 목표

##### 1) 비전

##### 동북아 및 한반도의 연계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경제권의 중추 거점

- 한반도 남부의 잠재력과 내부역량을 토대로 경제체력을 강화하여 환동해 및 환황해경제권 등 동북아의 국제경제권과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경제권의 창출

##### 2) 기본목표 및 전략

######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허브 및 차세대 융·복합 지식기반산업의 육성

-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국제물류의 전진기지 구축
- 신기술 융·복합 성장동력을 창출

###### 첨단·초고속 광역 및 글로벌 교통네트워크 구축

- 공항 및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국내외 연계 첨단 교통네트워크의 구축
- 중부경제권 및 남부경제권 내의 주요 거점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 기간교통망의 정비

###### 동북아 문화·관광 및 해양·산악휴양의 거점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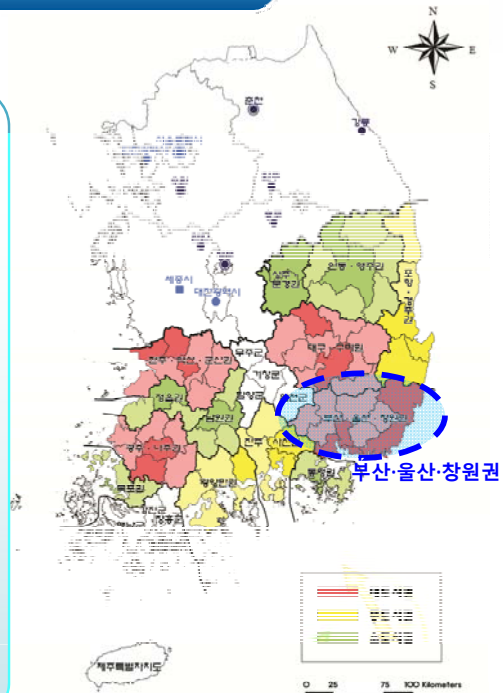
- 역사, 문화, 예술, 자연, 한류 등이 융합된 동북아 관광 및 휴양의 허브 구축
- 바다와 산악, 하천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해양관광 및 산악 휴양의 고부가가치 문화·관광산업 육성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1

(부산·울산·창원 대도시권)

### 1)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동북아 해양 비즈니스 및 남부경제권의 경제首都 기능 확충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산 신항의 국제물류지원단지, 항만 비즈니스 센터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거점기능을 강화</li> <li>- 국가기간산업 및 해양관련 산업, 선박금융, MICE 산업, 과학기술개발 및 인재양성, 국내외 기업 유치, 삶의 질 제고 등을 통해 한국 제2의 首都 기능을 강화</li> </ul>         |
| <b>선도전략산업 및 신성장 지식기반산업의 기능 강화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송기계산업, 해양플랜트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IT기술과 접목시켜 IT융합 기계기술산업으로 육성</li> <li>-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</li> <li>- 문화·관광, 휴양, 의료산업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기능을 강화</li> </ul> |
| <b>해양관련 융·복합 R&amp;D 지원과 인재양성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산대도시권에 R&amp;D특구를 지정하여 해양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제고</li> <li>- 기업친화형 인적 자원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기회의 확대를 도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부산·울산·창원 대도시권의 위치

23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1

(부산·울산·창원 대도시권)

### 2) 추진전략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신해양 비즈니스 관련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</b>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만물류 및 금융 등 관련 서비스산업 동반 육성(부산항 신항, 해양비즈니스밸리)</li> <li>- 유라시아의 관문 기능 제고 및 동북아의 오일허브(Oil Hub) 구축(울산)</li> <li>- 일본 규슈권과 초국경 경제협력 강화(부산-후쿠오카 자동차산업 등)</li> </ul> |
| <b>광역 산업클러스터 및 신성장 선도형 산업기반의 구축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남해안 국가기간산업의 클러스터 구축(남부경제권의 핵심 산업경제권)</li> <li>-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(조선 및 해양플랜트 수리기지)</li> <li>- IT융합 지식기반산업의 육성(융합부품소재, 해양플랜트, 신재생에너지산업 + IT)</li> </ul>     |
| <b>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고급두뇌의 지역 정착 유도</b>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래의 해양관련 융·복합 R&amp;D 지원(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, R&amp;D특구)</li> <li>- 기업친화형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(산·학·연 협력 및 기업대학)</li> <li>- 중소 및 중견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의 적극 창출</li> </ul>       |
| <b>융·복합 해양문화·관광산업의 특화 육성</b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북아 문화·관광의 허브 구축(해양·산악·하천, 문화·관광자원 발굴)</li> <li>- 장소판촉을 통한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의 집중 유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글로벌 및 광역 교통네트워크 구축</b>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부경제권의 신공항 건설 검토</li> <li>- 광역 교통인프라의 구축(순천~광주 송정 복선 전철화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4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2

(대구·구미 대도시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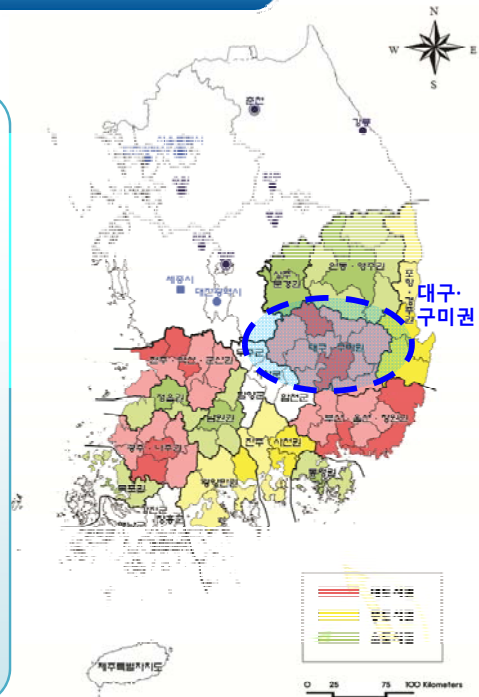
## 1)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

지식경제기반 글로벌  
산업기능의 강화

- 대구의 솔라시티와 경북의 에너지클러스터 등을 연계하여 신성장 그린 에너지산업 육성기반을 구축
- 주력산업 분야의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현장밀착형 IT융합산업벨트 구축

지식클러스터의 조성 및  
일자리 창출 기능 확대

- 대구 테크노폴리스, 대구·구미·청도의 교육관련 특구 등 교육·학술자원을 연계하여 학술진흥, 교육서비스 및 기업지원서비스 산업으로 육성
-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학습고용 인턴십 매칭, 특화된 청년학습고용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



대구·구미 대도시권의 위치

25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2

(대구·구미 대도시권)

## 2) 추진전략

그린에너지 및 IT융·복합  
산업의 경쟁력 제고

- 글로벌 그린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고급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
- IT융·복합 산업벨트의 구축 및 지식기반산업의 육성(의료, 에너지, 자동차부품산업)
- 선도전략산업 및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(대구 메카트로닉스, 첨단금속, 생물/섬유산업 등)

교육·학술자원을 활용한  
지식클러스터 조성 및 일자리  
창출

- 교육·학술 비즈니스벨트의 기업지원 R&D 서비스 제공(대학별 특성화, 학술 및 R&D지원)
- 교육특구의 인적자원 개발 및 문화·예술인력의 양성(대구, 구미, 청도 연계)
- 대구와 울산의 산업 및 인력교류 등 경제적 연계 강화(도시간 전문인력 공급 및 R&D 협력)

글로벌 및 광역 교통인프라  
구축

- 남부경제권의 신공항 건설 검토
-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(대구 도시철도 연장노선, 광역통근 철도망 조기 완공)

26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3

(광주·나주 대도시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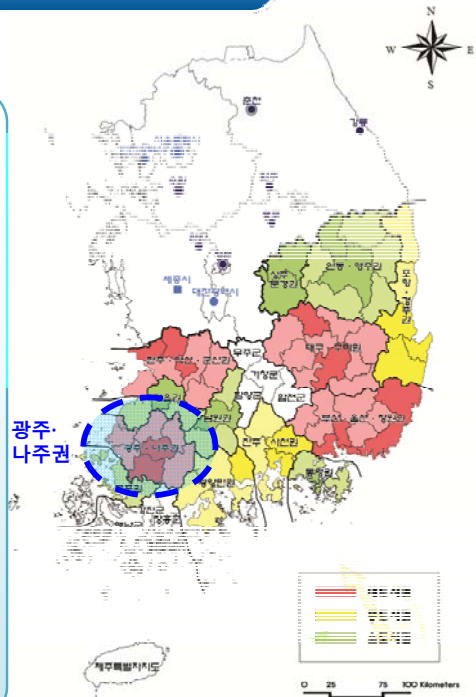
### 1)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

#### 光융합 기반산업 등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기능 확충

- 光산업, 자동차부품산업 등을 토대로 光기술기반 융합부품산업, 스마트 케어 가전(家電), 차세대 전지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
- 화순의 백신산업특구와 국립심혈관센터 및 장성의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

#### 아시아 문화·예술관광의 허브 기능 강화

- 광주비엔날레 등의 각종 축제를 기반으로 국제문화 교류를 활성화시켜 아시아의 문화 및 예술관광 거점으로 육성
- 남도음식, 고싸움 등 다양한 유형의 테마파크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의 차별화를 도모
- 영산강 유역의 역사·문화자원과 생태체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특화된 문화·관광 프로그램을 개발



광주·나주 대도시권의 위치

27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3

(광주·나주 대도시권)

### 2) 추진전략

#### 과학기술 및 연구역량의 강화로 미래산업의 진흥과 일자리 창출

- 광주~광양만~목포의 삼각 연계 협력 강화(광주~광양만: 전통·기간산업축, 광주~목포: 에너지 산업축, 목포~광양만: 해양관광벨트축)
- 光융·복합 산업의 R&D 강화 및 상용화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
- 문화 및 에너지 산업의 육성(콘텐츠 개발, 미래문화산업 육성, 친환경 에너지산업 클러스터)

#### 문화·예술융합기능의 확충

-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육성(국립아시아문화전당, 국제 문화·관광상품 개발)
- 문화·관광의 차별화 및 연계·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(곡성,지리산,담양등)
- 영산강 생태·역사문화 관광거점의 조성(광주, 나주, 영암의 문화유적 전승 및 관광휴양시설)

#### 글로벌 및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

- 국제항공 연계기능의 확충(광주~인천 노선 개설)
- 광역교통 인프라의 구축(88올림픽고속도로의 조기 확장)

28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4

(전주·익산·군산 대도시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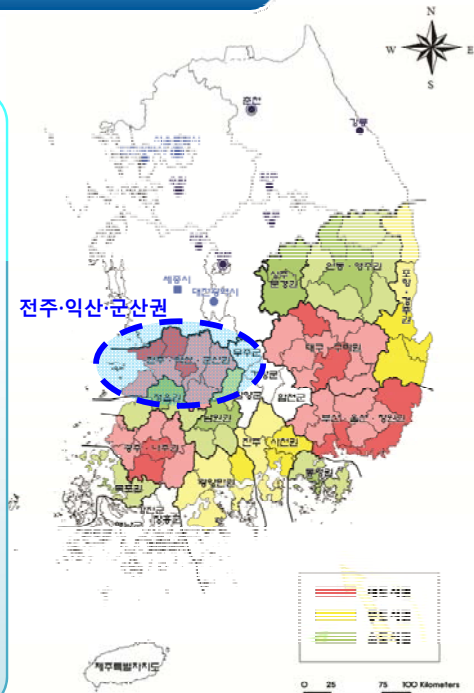
## 1)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

서해안 중부지역의  
국가발전전략기지 역할 분담

- 전북 북부~충남 서부~경기 남부의 서해안을 연결하는 지식·첨단산업의 서부 벨트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기지로 육성
- 서부 벨트의 신재생에너지, 차세대자동차,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주력산업과 IT산업 간의 융·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

식품산업의 전략적 허브 기능  
강화 및 첨단부품소재 R&D  
기능 확충

- 익산의 국가식품산업단지와의 농촌진흥청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농수산대학 등을 중심으로 식품 및 농생명 산업의 R&D 강화와 특성화를 추진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
-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식량비축기지를 건설하여 식량 및 식품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조절에 대비하고, 미래식량의 원천기술을 개발
- 신재생에너지, 탄소섬유, 방사선융합기술(RFT) 등의 기술개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 대학교의 관련 R&D 역량 제고



전주·익산·군산 대도시권의 위치

29

## 2 대도시권 발전전략4

(전주·익산·군산 대도시권)

## 2) 추진전략

서부 벨트의 신성장 융·복합  
산업클러스터 조성

-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(전주의 탄소·자동차·기계, 군산의 선박·자동차, 익산의 보석 등, 탄소복합재 시험·인증센터 설립)
- 전주와 대전 및 대덕연구단지의 R&D 클러스터와 기능적 연계 강화(연구인력 및 산업연계 협력)

국가식품 및 농생명 산업의  
전략적 허브 구축

- 식품 및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(R&D 협력,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)
- 국가식량비축기지와 씨드밸리(Seed Valley) 사업의 연계
- 전통예술·문화의 창달과 지덕권(智德圈)의 휴양·힐링산업 진흥

새만금 사업과 광역교통 인프라  
구축

- 1단계 새만금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(방수제(防水堤), 새만금 내부 성토(盛土) 사업 등)
-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(익산~대야 복선전철화, 새만금~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)

30

### 3 중도시권 발전전략1

(포항·경주 중도시권)

#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# 포항~경주~울산의 트라이앵글 산업경제권 구축

- 원천기술기반, 자동차,조선,신소재·부품 산업

##### 철강산업의 다변화 및 국책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

- 포항의 철강산업과 첨단신소재의 융·복합화  
- 경주의 방폐장과 한수원 이전, 양성자 가속기 유치 등  
3대 국책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

#####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된 문화·관광도시의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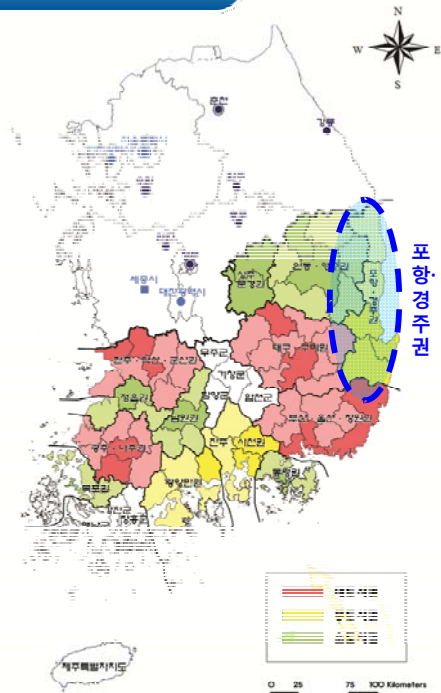
- 경주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되는 살기좋은  
문화·관광도시로 육성  
- 울진은 포항의 POSTECH 해양대학원 설립,  
한동해해양과학관 유치로 해양과학도시로 육성

##### 동해안 융·복합 관광·휴양벨트의 구축

- 경주(신라문화와 숙박)-포항(산업과 해양레저)-  
영덕(유교문화와 대게)-울산(산업과 금강송, 보양온천,  
해양레포츠)-울릉(녹색 섬 문화와 독도) 등  
해양관광·휴양지대를 조성

##### 항토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

- 포항 과메기, 영덕 황금은어, 영덕게장 및 성게, 울진  
대게와 홍게 등 지역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 
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



포항·경주 중도시권의 위치

31

### 3 중도시권 발전전략2

(광양만 중도시권)

#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# 기간산업 및 물류·교역 중심도시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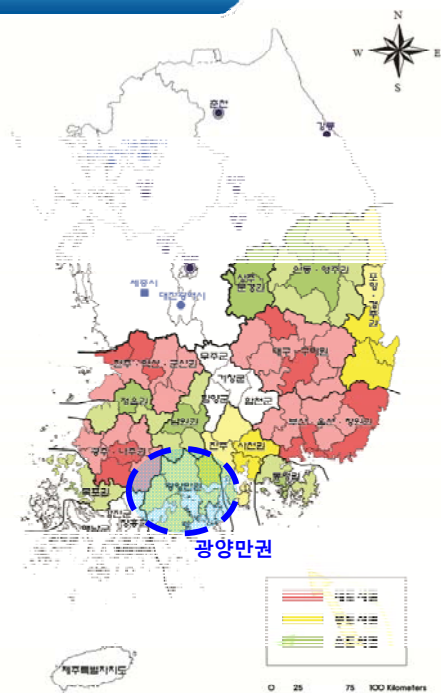
- 여천 및 울촌산업단지와 광양제철을 중심으로 이미  
집적된 석유화학, 제철 및 기계산업 등을 미래 신성장  
산업으로 육성  
- 광양컨테이너항과 광양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 
철강·항만·조선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육성  
- 순천의 고강도 경량 자전거산업 등 특화된 신소재  
산업을 육성

##### 남해안 중부의 관광거점 및 생태문화·관광산 업 육성

- 섬진강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와 한려수도가 교차하는  
문화예술지대를 조성하여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개발  
-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,  
마리나와 크루즈항 등 고급 해양레저관광기반을 구축  
- 순천만에 세계정원과 수목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관련  
산업을 육성하고, 세계적인 생태문화관광지로 조성

##### 농특산물 및 전략산업 육성

- 광양의 매실, 보성의 녹차, 구례의 친환경 우리밀,  
고흥의 유자·석류·참다래 등의 전략품목을 융·복합  
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촉진



광양만 중도시권의 위치

32

### 3 중도시권 발전전략3

(진주·사천 중도시권)

#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# 항공·소재산업 및 조선산업의 육성

- 사천과 진주를 항공산업기술 및 핵심부품 생산기지로 육성(항공 우주산업도시),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
- 항공부품·소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산업밀착형 항공부품 생산요소기술 연구거점을 구축
-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인 갈사만에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조선기자재 등의 생산을 추진

##### 수변·해양관광산업 및 수산업의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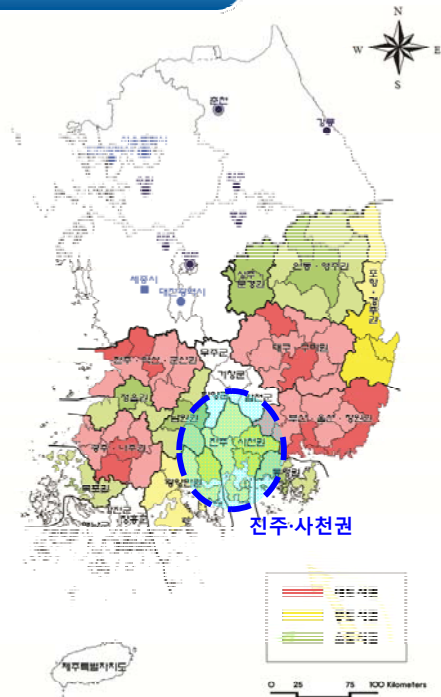
- 진주는 남강, 진양호 등의 워터프런트와 가좌천, 나불천 등의 수변문화·관광산업을 육성
- 하동에 통영 미륵산과 해남 땅끝마을을 연계하는 남해안 중부의 관광명사로 육성
- 사천의 실안 관광지 조성, 삼천포항의 「어항구」 지정(수산업 육성)

##### 실크산업 및 스포츠 경관산업의 육성

- 진주를 실크산업 중심지로 육성(실크전문단지, 실크패션 디자인센터 및 신소재 개발센터 건립)
- 남해에 잔디생산단지, 잔디테마공원과 잔디사파리 조성

##### 한의학의 산업화 및 한방산업의 육성

- 산청 한방 콤플렉스 조성(약초식물원, 한방 휴·요양촌, 한방 치유형 펜션단지, 한방전문 치유센터)



진주·사천 중도시권의 위치

33

### 4 소도시권 발전전략1

(안동·영주 소도시권)

#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#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 및 생물·한방산업의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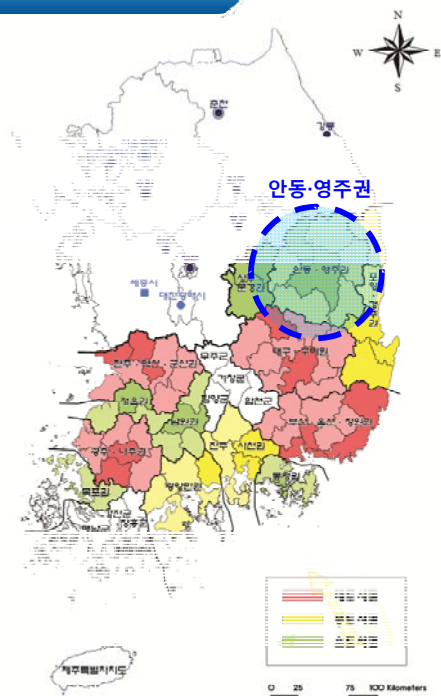
-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(계획인구 10만 명)에 행정, 교육, 문화, 유통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
- 재배, 가공, 유통 등 약용작물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한방자원을 활용한 요양, 레저, 치료 등이 가능한 천연물기반 코스메틱/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

##### 유교문화의 창달과 백두대간의 생태공원 조성

- 안동에 국립세계유교·선비문화공원,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유교관련 문화관광중심지로 육성
- 영주의 산림테라피단지와 봉화군의 봉화수목원 등을 연계하여 산림바이오 테크노파크를 조성
- 예천의 산업군충과 청정자원을 자원화하여 백두대간 곤충생태공원을 조성

##### 휴양산업 육성 및 향토자원의 연계·협력개발

- 청송의 주왕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휴양산업을 적극 개발
- 영양의 고추, 사과 등 지역특산품의 농산물 생산·유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을 강화



안동·영주 소도시권의 위치

34

## 4 소도시권 발전전략2

(통영 소도시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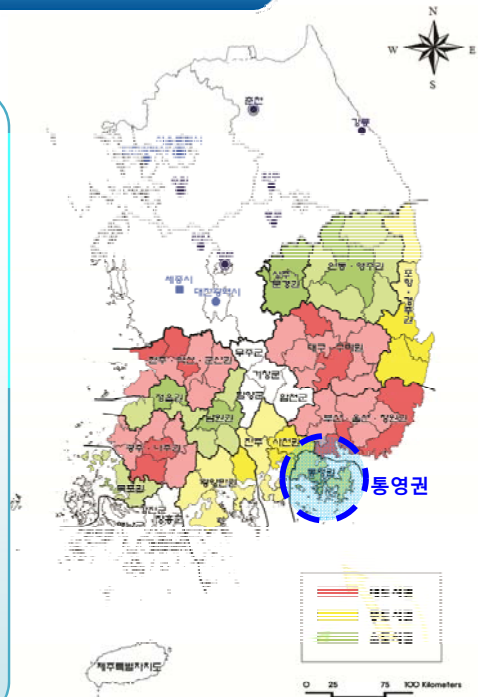
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 조선산업의 중추도시 육성

- 해양 설계 분야, 해양자재의 국산화 및 관련 기업체의 동반 성장을 통해 거제를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중추도시로 육성
- 고성의 '조선산업특구'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·대형선박을 건조

#### 신성장 관광산업의 육성

- 통영에 미륵도 관광특구 및 한산도 역사관광자원을 남해안의 주요 관광지로 개발하고, 용남지구에 요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
- 고성에 당항포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도모



통영 소도시권의 위치

35

## 4 소도시권 발전전략3

(목포 소도시권)

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 신성장 동력산업 및 조선산업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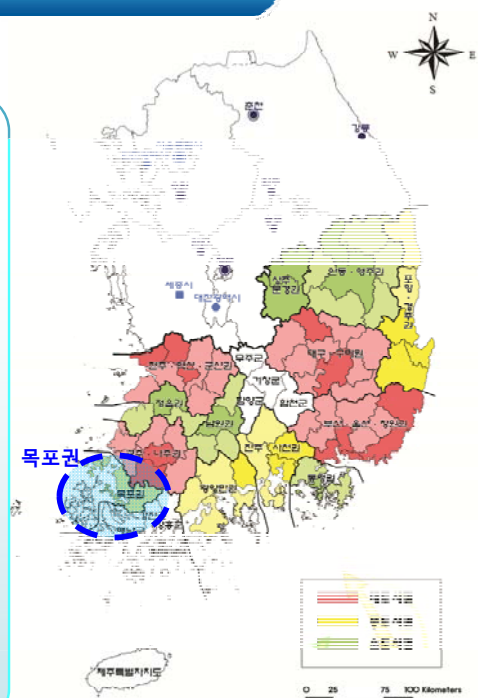
- 목포의 파인세라믹 산업과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형 조선산업을 육성
- 목포와 영암의 관련대학을 중심으로 조선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

#### 다도해 관광산업 육성 및 남도예술의 창달

- 목포항의 다도해 유람선 운항사업을 활성화하고, 목포와 신안에 요트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양관광 중심도시의 기반을 구축
- 남도예술의 창달 기반을 강화
- 무안은 회산백련지(白蓮池)를 체험·휴양형 관광지로 개발

#### 지역 특화산업 육성

- 영암 무화과의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- 신안 천일염 산업의 생산·가공·마케팅 등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



목포 소도시권의 위치

36

## 4 소도시권 발전전략4

(정읍 소도시권)

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 방사선융합 기반기술의 구축 및 산업기반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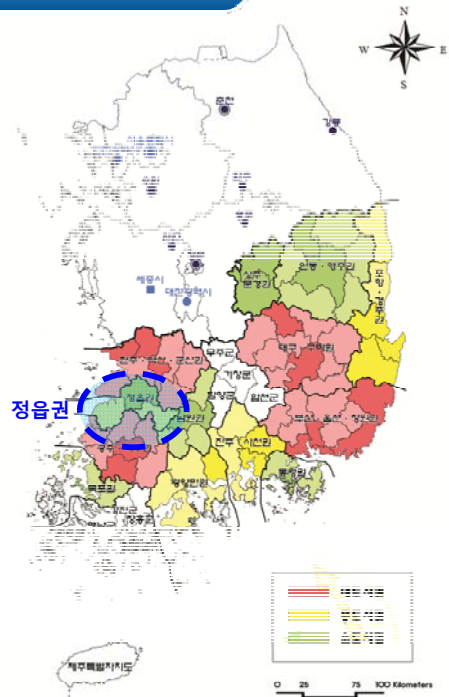
- 정읍의 방사선과학연구소, 안전성평가연구소, 정읍분소,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과 연계한 방사선융합기술(RFT) 벨트를 조성하여 관련 R&D기반 구축
- RFT기술과 식품 및 농생명 관련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융·복합 산업 기반을 강화

#### 역사·예술문화 및 해양관광자원의 연계 협력개발

- 정읍의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, 동학농민혁명 역사관광지역 등을 연계하여 역사·예술문화 관광산업으로 특화 발전
- 정읍의 산악 관광자원, 고창의 해양스포츠 관광과 갯벌생태자원,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해양레저 관광 등을 연계하여 사계절 특화관광산업 육성

####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

- 정읍의 한우, 정소 등 축산물의 현지가공 및 고창의 복분자 산업, 부안의 누에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여 농가소득의 증대 도모



정읍 소도시권의 위치

37

## 4 소도시권 발전전략5

(상주·문경 소도시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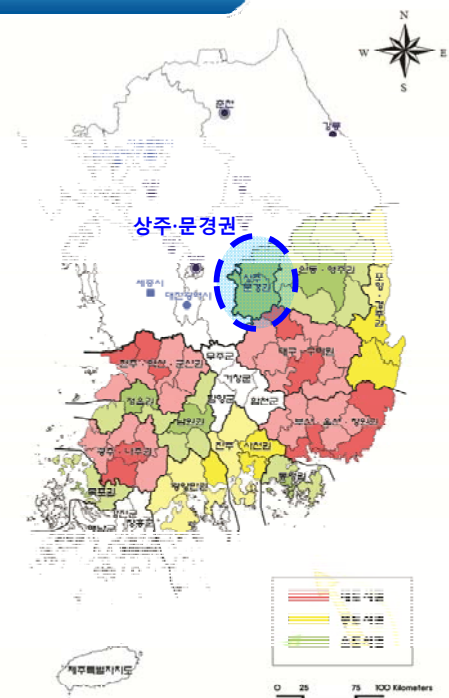
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 문화체육 및 생태관광의 활성화

- 상주에 낙동강 주변의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·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체육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
- 문경에 문경새재 테마파크,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, 문경고려촌 등을 조성하여 중부내륙의 생태관광 및 스포츠 도시로 육성

####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

- 상주의 곱감, 오이, 양봉, 육계 등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확충
- 문경의 오미자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명품화 기반 구축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내발적 발전기반 조성



상주·문경 소도시권의 위치

38

## 4 소도시권 발전전략6

(남원 소도시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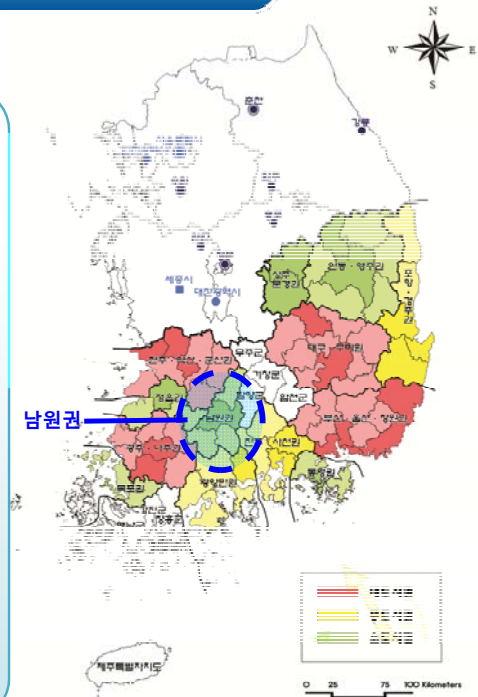
### 1)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

#### 관광산업의 특화 및 차별화 추진

- 남원의 풍부한 문화·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연수관광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
- 남원 일대의 향토자원인 허브산업과 관련된 허브클러스터의 육성
- 장수의 논개 생가지 및 논개사당과 승마체험장을 중심으로 한 말(馬)산업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특화발전 추진

#### 지리산 주변의 연계 협력 개발 및 전통 식품산업의 육성

- 장수는 내륙의 교통요지인 이점을 활용하여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등 지리산 주변의 3개도 7개 시·군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
- 순창은 '장류특구'를 기반으로 장류의 6차 산업화로 전통 식품산업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추진



남원 소도시권의 위치

39

## 5 소도읍 발전전략

#### 전략복도

- 무주: 고산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산업인 천마(天麻)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, 청정환경을 중심으로 관광휴양산업의 성장기반 구축

#### 전략남도

- 장흥: '생약초·한우특구'를 중심으로 한방약초 특성화 단지 조성
- 강진: '고려청자 문화특구'를 중심으로 도예촌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
- 완도: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, 충무공 이순신,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 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활성화, 전복의 명품화 사업
- 진도: 다도해의 특색을 살린 테마섬 개발과 진돗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관광상품화 추진
- 해남: 전국적 브랜드인 '땅굴'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, 향토산업인 고구마, 겨울배추, 세발나물, 맥주 보리 등을 활용한 가공·유통산업기반 구축

#### 경상남도

- 거창: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개발, 관련 기업육성,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특화산업으로 육성
- 함양: 게르마늄 산삼의 산업화, 함양곶감 특성화, 산양산, 백연, 하고초, 자미고구마 등 향토자원의 기능성 식품개발과 6차 산업화를 추진
- 함천: 가야산(해인사), 황매산(함천호), 영상테마파크, 황강 주변 종합개발 등 내륙관광 인프라의 구축, 향토한우 클러스터의 중점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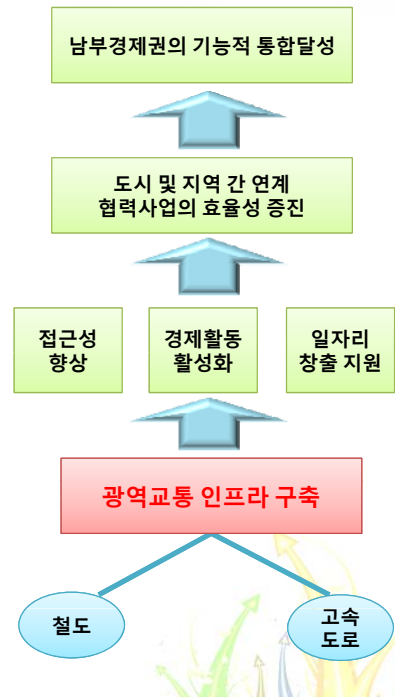
40

##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

### 1) 광역교통 인프라의 연계 구축

- ▶ 남부경제권 내의 도시 및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, 기능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요 도시 및 경제활동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의 우선적인 구축을 추진**
- 광주~남원~함양~고령~대구 간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: 광주 · 나주, 대구 · 구미 및 전주 · 익산 · 군산(남원 경유) 대도시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기능적 연계 및 통합을 도모
  - 경전선 철도(삼랑진~진주~순천~보성~광주 송정) 구간 중 순천~보성~화순~광주 송정 구간 : 복선 전철화를 조기에 완공하여 남부지역 도시권 간의 연계 통합을 촉진

- ▶ 도시권 내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**
- 부산외곽순환도로 : 조기에 완공하여 부산과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완화
  - 김천~구미~대구~경산~청도~밀양을 연결하는 광역통근 철도망 : 지역 경제 활동의 원활화를 지원
  - 새만금 신항~새만금~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: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촉진 시킴으로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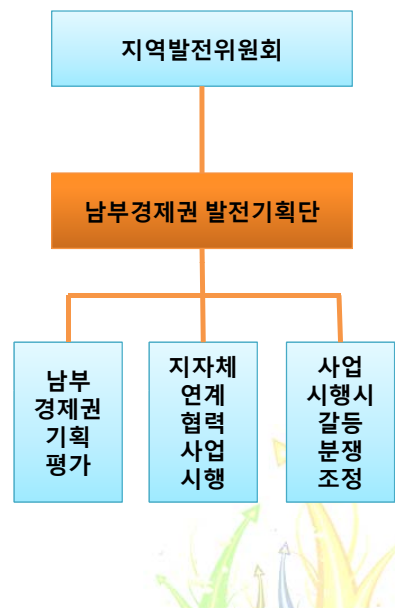


##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

### 2) 광역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

- ▶ ‘남부경제권 교통정책본부’ 설립**
- 남부경제권 내의 연계 및 통합을 촉진시키고, 광역교통 인프라의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(Control Tower) 설립이 필요

- ▶ ‘남부경제권 발전기획단’ 설립**
- 남부경제권의 통합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, 관련 지자체 간의 연계 ·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,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추진 기구로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기구 설립이 필요
  - 이와 별도로 프랑스의 DIACT(과거의 DATAR를 확대 개편)처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‘계획계약(Plan Contract)’과 같은 정책수단에 의한 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



## V.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



### V.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



#### 1 실천방안

##### 1) 광역도시계획체도의 정립

######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의 의무화

- 대·중·소 도시권별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으로 통합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

###### 계획기간의 조정

-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년으로 규정 → 계획의 신뢰성 저하
-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을 각각 10년과 8년으로 조정하되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각각 5년과 4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

######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

- 국토종합계획 - 광역도시계획 - 시행계획으로 연결되는 3단계의 계획체계를 정립
- 공간계획체계의 단순화와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

###### 관련 법률의 개정

- 「국토기본법」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 필요



## 1 실천방안

### 2) 지역 간 연계 · 협력사업의 촉진

#### 연계 ·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정지원

- 연계 · 협력사업의 발굴, 협의, 조정, 합의도출, 사업화 등에 긴 절차와 시간 소요 → 사업의 상시적 발굴과 지원이 필요
- 연계 · 협력사업은 ‘광역 · 특화 · 자율 · 협력’의 원칙을 지향하면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채택되 선정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행 ·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계 · 협력사업의 경쟁을 유도
- 연계 · 협력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광특회계에 연계 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, 지역 연계 협력기금을 설치 · 운영하는 방안,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,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

####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

- ‘지역발전위원회’를 중심으로 중앙 관련부처의 협력 및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
- ‘지역발전위원회’는 연계 · 협력사업의 발굴, 행 · 재정적 지원, 애로사항 해결 등 연계 ·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
- 『국가균형발전특별법』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’와 세출예산 차등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 ·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



## 1 실천방안

### 3)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 확대

#### 중앙정부의 규제완화

- ‘지역특화발전특구(지역특구)’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의 효과를 평가하여 규제특례의 부작용이 적고,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규제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
- 특히 규제특례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『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』에 대한 특례, 『도로교통법』에 대한 특례, 『농지법』에 대한 특례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대한 특례 등의 효과를 적극 검토

#### 지방정부의 계획고권(計劃高權)과 도시관리의 자율성 확대

- 도시용 토지의 공급과잉과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‘개발허가지침’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도시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 추진
- 영국은 『분권화 및 지방화에 관한 법률』의 입안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계획 권한과 책임의 강화를 강조



## 2 정책건의사항

### 1) 지역개발관련 법령의 통폐합 및 단순화

#### 국토의 난개발 및 過開發 방지

- 현재 각종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은 모두 39개에 달하고 있음
- 이들 법률에 의해 지정된 각종 지역·지구 수는 55개, 총 지정면적은 127,808km<sup>2</sup>로 남한 면적의 1.3배에 달하나 사업지구 면적은 0.4%에 불과하여 국토의 난개발과 과개발을 초래

#### 관련 법률의 통합정비

- 국토부는 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, 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」 등을 우선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(2011. 9)
- 이외에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등 특정산업육성에 관련된 법률과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등 도시개발에 관련된 법률의 통합뿐만 아니라 지경부, 행안부, 농림부, 문체부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도 대폭 통폐합하여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



## 2 정책건의사항

### 2)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

#### 선도산업 육성의 성과

- '5+2 광역경제권'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은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 에너지, LED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해 왔음
- 선도산업의 육성을 통해 1단계 사업(2009.7~2011.11)에서는 총 14,401명의 고용창출과 7조2,421억 원의 매출,



## 2 정책건의사항

### 3) 중앙정부의 차등지원 정책체계 구축

#### ☞ 지방의 고급 일자리 창출

- 세종시,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지방대학 교수들의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2~3년 연장하여 고급두뇌의 지방정착 기회를 확대
- 기존 지방기업 및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금융,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운용 시 지방의무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,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확대 지원 등이 필요

#### ☞ 저발전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지원 강화

- 소도읍 및 도서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'신활력사업' 과 유사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이 필요
- 각 소도읍 또는 저발전지역의 시·군별로 매년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직접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
- 지자체별로 내발적 발전역량을 토대로 차별화 전략이 성공한 사례 : 경남 함양군과 전북 완주군 (귀촌·귀농시책을 토대로 인구증가), 경북 봉화군과 경남 산청군(인구 감소추세 완화), 전남 영암군 (활발한 기업유치), 전남 곡성군(기차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증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) 등 참조

감사합니다

